



북한의 농업

김성남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5

4

讲义

50

5

퀴즈

69

6

보고서

73

7

자료

75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북한 농업의 이해>는 북한 농업의 발전 과정과 현황 및 향후 남북한 간 농업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교과목이다. 수강생들은 이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북한 농업의 근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오늘날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향후 남북한 간 농업협력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어떠한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할지 배울 수 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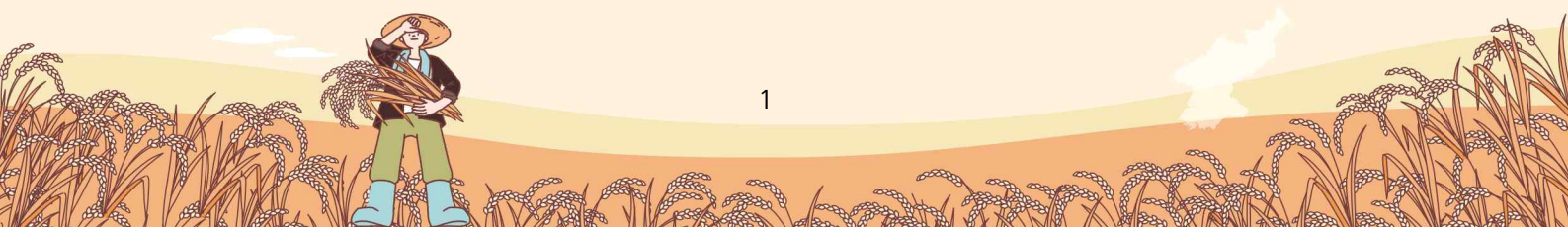
학습목표

- (1) 북한 농업의 근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운동, 농업금융과 농산물 유통체계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 (2) 오늘날 북한 농업의 현황에 대해 학습한다. 북한 농업의 기초 생산단위인 협동농장의 운영 방식을 비롯하여, 북한 농업과 축산업의 주요 특징을 통계 수치를 통해 살펴본다.
- (3) 향후 남북한 간 농업협력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어떠한 협력이 가능할지 학습한다.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비롯하여, 농업 및 축산업 분야 협력 방안, 나아가 북한 농업의 체제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살펴본다.

0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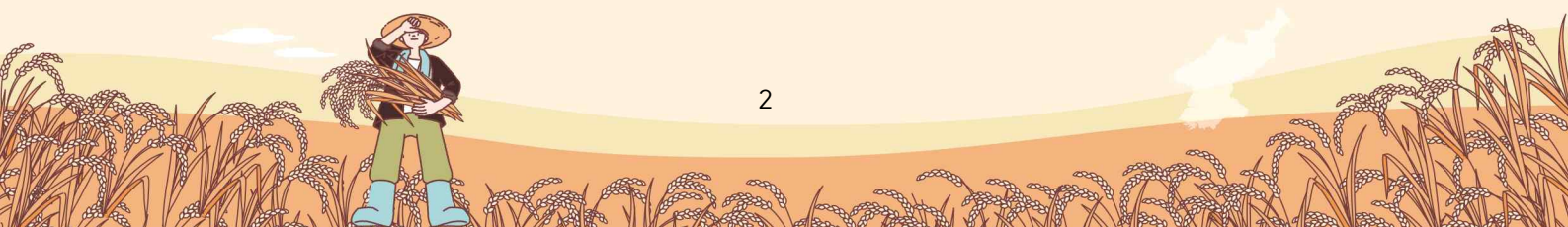
수강생들은 이 강의를 통해 현대 북한 농업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현대 북한 농업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의 원인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북한 농업의 현황에 대해 통계 수치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수강생들은 이 강의를 학습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 농업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남북한 간에 어떠한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지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차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04

주차별 구성

1주차	북한 농업의 초기조건: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운동
2주차	북한의 농업 현황과 제도
3주차	북한의 축산업
4주차	북한의 농업금융과 농산물 유통
5주차	남북농업협력방안 구상 1 :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6주차	남북농업협력방안 구상 2 : 농업분야 체제 전환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
주차

북한 농업의 초기조건: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운동

1-1

해방 직후 북한의 농업 현황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의 농업> 강의를 맡은 김성남입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한국과 같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함께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로를 주적이라고 여기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는 긴장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북한에 대한 뉴스는 매일 저녁 뉴스 전반부에서 다뤄질 만큼 한국인들은 북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개 그 관심은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 한정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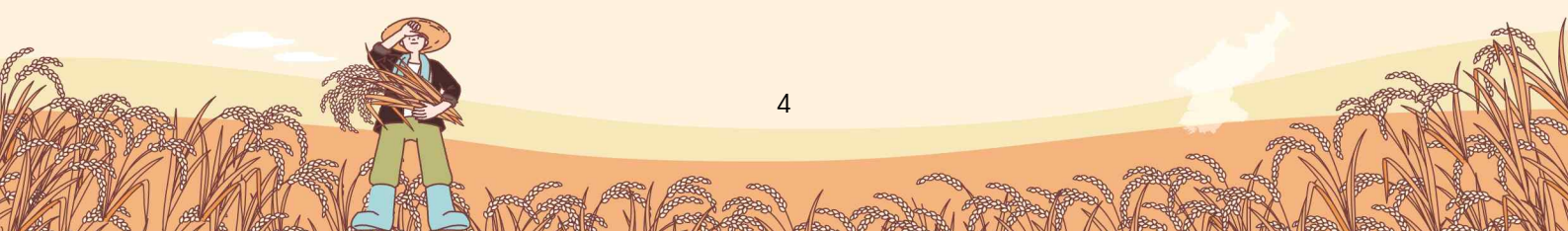
그런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되기 전까지는 1,000년 이상 단일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를 채택한 두 국가로 나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도 외에는 다른 조건이 유사한 국가가 서로 상이한 제도를 채택한 결과, 경제적 성취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경제사 연구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북한이 오늘날과 같은 최극빈 후진국의 상태에 놓이게 된 역사적 경험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강좌는 북한경제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북한의 농업을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왜 농업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선진 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해야 하는데, 제조업 발달의 전제조건이 바로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농업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농업에 투입되던 노동력과 자본을 제조업 부분에 더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60년~1970년대 경제개발기에는 물론 중화학공업과 같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와 동시에 농업 증산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초에 통일벼라는 신품종 벼가 개발됨으로써 주식인 쌀을 비로소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국가적 역량을 더욱 제조업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의 발전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강좌를 통해 북한 경제의 여러 측면 중에서 북한 농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좌는 북한의 농업을 큰 주제로 하면서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강에서는 현대 북한 농업 시스템의 근간이 된 1940년~1950년대 북한의 토지개혁 및 농업협동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강과 3강을 통해서는 각각 북한의 농업과 북한의 축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과 실제 운용되고 있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강에서는 북한 농업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농업금융과 농산물 유통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5강에서는 향후 북한의 개혁, 개방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 가능한 남북한 간 농업협력사업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6강에서는 북한의 농업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농업부문 체제전환 문제에 대해서 중국 등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역사나 제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세부 주제를 다루면서 전문용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강의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는 참고자료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를 수강생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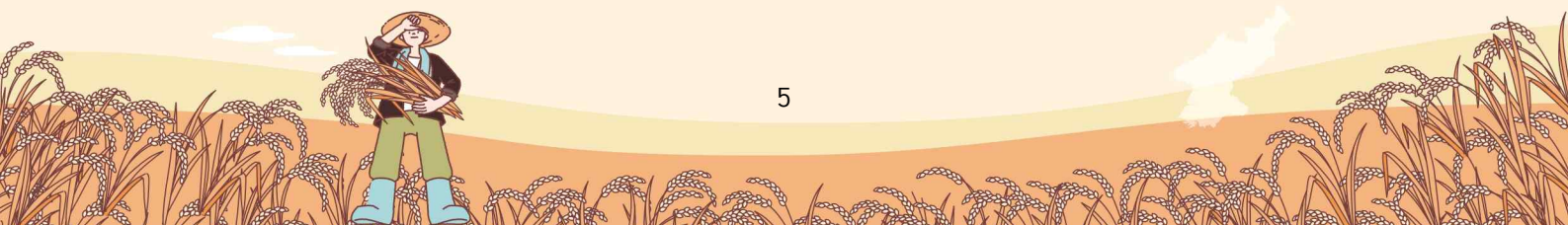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북한 농업의 초기조건: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운동'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농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제도가 만들어진 1940년대 토지개혁에서부터 1950년대 농업협동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도 마찬가지로 토지개혁, 남한에서는 법령의 명칭을 따라 농지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토지개혁 또는 농지개혁은 식민지기까지 지속되었던 구래의 지주제도를 폐지하고 오늘날과 같은 자작농 중심 제도를 창설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농업 제도의 근간이 마련된 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주제도라는 개념은 법률적 제도로서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실제 경작자인 농민에게 소작, 즉 임대를 주면서 지대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는 상태이며, 경제적인 현상으로서 이러한 지대를 수취하는 부재지주가 농지 소유관계에서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매김한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토지개혁 또는 농지개혁의 결과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경자유전, 즉 경작자가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되는 오늘날과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현재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 121조 1항으로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경작자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가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불법 농지 투기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워진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향후 공공개발이 예상되어 비농지로 전환하여 개발 수익이나 토지 수용 보상금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노리고 농민이 아닌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하여 해당 농지를 마치 경작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아직까지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과거 지주제도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폐단을 낳았다는 역사적인 반성의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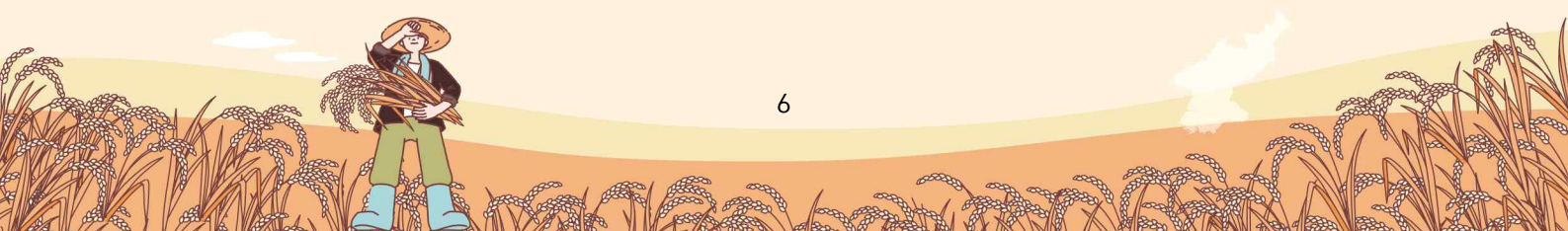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에 남한과 북한지역에서 이러한 토지개혁에 대한 논의가 분출하게 되었는데, 북한의 농업도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초기 제도적 근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식민지기 이래 북한지역에서의 농지 소유 구조의 경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북한 토지개혁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민지기 영농형태별 농가 구성비의 변화를 통해 지주제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기 초창기인 1915년의 시점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자작농은 21.7%에 불과한 반면 농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소작농은 35.9%, 그리고 일부 자신의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부족한 경지는 지주로부터 소작을 얻는 자소작농은 40.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주제라는 것은 식민지기에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고 조선 후기 이래 진행되어온 병작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반 계층이나 농업 경영에 성공적이었던 계층이 농지소유의 규모를 늘리는 가운데,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상대적으로 농지가 부족한 농민에게 병작을 주는 관행은 조선 후기 이래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1915년 시점에서도 상당수의 농민이 소작을 얻어 경작을 하는 상태에 있었고, 자작농은 21.7%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농지 소유구조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제는 기존의 지주 계층을 식민지 농정의 파트너로 삼음으로써 지주를 매개로 하여, 식민지 조선을 일본 제국의 쌀 생산 기지로 만들려는 농정을 관철시키게 됩니다.

1920년대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이 그러한 농정의 일환이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서 전세계적인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영세 농민들의 경제적 지위가 더욱 열악해지고, 일본에서도 쌀이 남아돌게 되면서 이러한 농정 기조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1930년대 추진된 일제의 농지령 제정과 자작농지창설사업 등이 그러한 정책이었습디만, 이것이 농지 소유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가져올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해방 직전인 1941년 시점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자작농의 비율은 17.8%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소작농의 경우 1915년 35.9%에서 1941년 시점에서 전체 농민의 절반이 넘는 53.6%로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주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그대로 존속하게 되면서, 그 해결이 해방 후 한국인이 스스로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주제의 동향은 식민지기 인구 증가의 결과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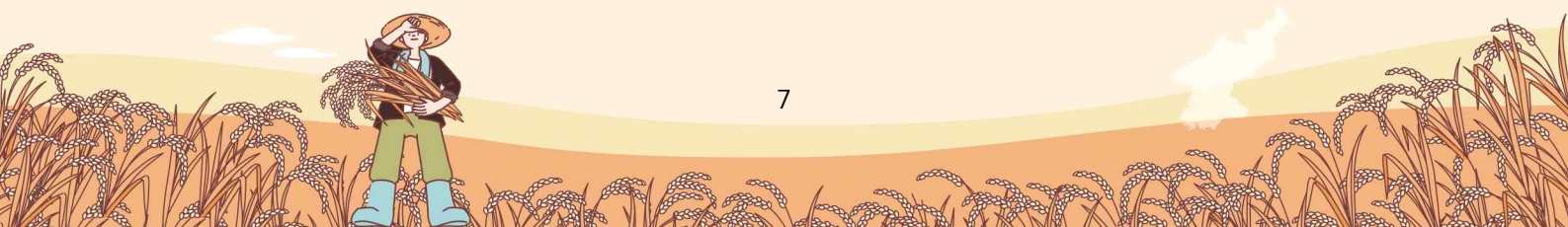
식민지기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일제가 농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펼친 결과, 증가하는 인구를 고용으로 흡수할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미진하여, 증가한 인구압력이 그대로 농업 부문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방 전 지주제의 지역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43년 시점에서 소작지율을 남북 지역 간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경지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였을 때, 논에서는 남한이 69%, 북한은 64.3%로 두 지역이 비교적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쌀은 자가소비 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재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부재지주가 농지소유 규모를 늘리는데에는 밭보다는 논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인 경우 남한, 북한지역을 막론하고, 소작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의 경우를 보면 남한이 63.1%, 북한이 4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한 지역의 경우 밭의 소작지율도 논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에 비해 북한지역의 경우 상업화하기 어려운 밭에서는 소작지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이는 북한지역의 경우 토지가 척박하여 밭의 생산성이 낮았던 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지역의 경우 논을 중심으로 지주제가 발달하였다는 것이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지역에는 경지 중 논인 면적이 남한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주제의 강도가 높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영형태별 농가 구성의 남북 지역 간 비교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1942년 시점의 자료를 보면 남한 지역의 경우 자작농은 13.8%에 불과했던 반면 북한지역은 26.2%로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대 계층인 소작농의 경우 남한 57.6%, 북한 45.7%로서 북한의 소작농 비중이 더 적습니다. 즉, 식민지기 지주제는 논 중심의 농업이 발달한 남한 지역에서 더 심각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남한보다 북한지역에서 토지개혁이 더 이른 시기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는 남한과 북한 모두 어떠한 방식으로 지주제를 없애고, 경자유전 원칙의 농지소유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와 같은 이념 투쟁의 양상을 띄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지역의 경우 해방 이후 소련 군정이 실시되었고, 사회주의 이념을 채택한 정치 세력이 정부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남한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주제의 강도가 약했다는 점은 지주의 이해관계를 공론의 장에서 관철되기가 더욱 어려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한과의 비교를 통해 이와 같은 배경의 차이가 작용했다는 점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북한지역에서도 지역별로 지주제의 발달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논 중심의 쌀농사가 주축이 되는 황해도와 평안남북도의 경우 남한 지역과 유사한 정도로 지주제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2년 시점에서의 북한지역 6개 도의 경영 형태별 농가 비율을 살펴보면, 황해도의 경우 자작농이 15.4%, 소작농이 58.8%로서 남한 지역 평균인 자작농 13.8%, 소작농 57.6%와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평안남북도의 경우에도 자작농의 비율이 남한 지역 평균보다 높지만, 소작농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어 역시 지주제가 발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본래 토지가 척박하여, 논보다는 밭농사 위주로 이루어지던 한반도 동북부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던 함경남북도의 경우, 소작농의 비중이 상당히 낮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경우 소작농의 비율이 28.3%, 함경북도의 경우 18.4%에 불과하였습니다. 다만 함경남북도의 경우 식민지기에 걸쳐 지주제가 급진전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함경남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917년을 경영형태별 농가 수를 100으로 놓고 볼 때, 자작농의 경우 1927년 90, 1932년 71로 감소하였고, 소작농의 경우 1927년 106, 1932년에 188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지수가 188이었다는 점은 같은 기간에 소작농가 수가 거의 2배가량 증가하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함경남도가 다른 도와 비교해볼 때 지주제의 발달 정도는 크지 않았지만, 급격한 농민층 몰락이 이루어진 결과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이 되었다는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토지개혁의 배경이 되었던 해방 전 시기의 북한지역의 지주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방 직후 시점에서 보면, 지주제 경영의 확대 현상은 남북한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북한지역의 경우 밭보다는 논 지역을 중심으로 지주제가 발달한 특징이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황해도, 평안남북도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주제가 강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북한지역을 통치한 소련 군정과 사회주의 세력은 토지개혁을 서둘러서,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전격적으로 토지개혁에 돌입하여 단기간에 지주제를 혁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북한의 토지개혁 : 법령 제정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해방 직후 북한의 농업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북한지역에서의 토지개혁 실시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에 법령이 반포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불과 1개월 만에 모든 사업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남한에 비해 시작도 빨랐고, 기간도 훨씬 짧았습니다. 이는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와 토지 몰수와 농민에 대한 분배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먼저 토지개혁 법령의 제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서는 조선공산당, 조선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정당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앞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해방 직후에는 정치적 이념에 상관없이 과거의 지주제도를 없애는 토지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였지만, 그 방식을 두고 이견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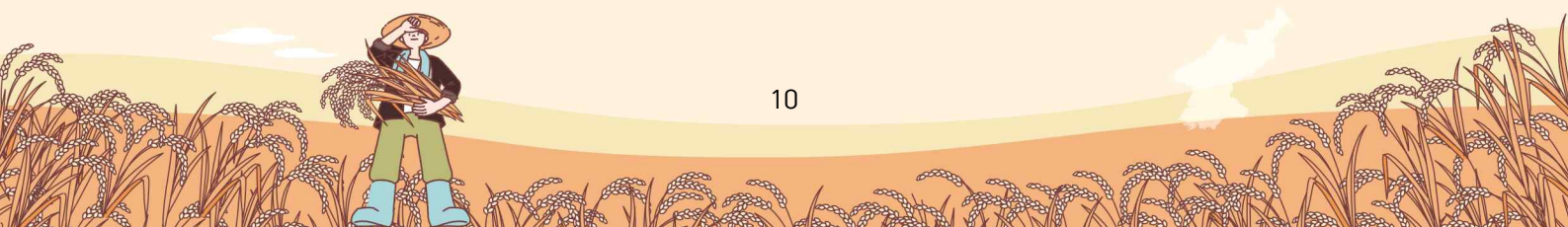
공산당 계열에서는 지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자는 주장을 하였지만, 사회민주당 등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지주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여 지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매수 방안을 주장하였습니다.

북한지역에서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토지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은 조선공산당이었습니다.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된 '공산당의 토지 문제에 대한 결의'를 살펴보면 전문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루조아민주주의혁명 과정에 있어서 전 토지를 국유화하고 이것을 농민의 노력과 그 가족인구에 비례하여 재분배함으로써 완전 해결되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가운데 과도적 단계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는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면서 농민에게 경작권을 분배하자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국가 소유로 몰수하는 토지가 무엇인지는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의는 일본제국주의자, 민족반역자, 고리대금업자, 사원, 향교, 종중 등 공동체 소유 토지, 그리고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 외의 토지는 모두 몰수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몰수한 토지는 국가 소유이면서 농민위원회 또는 인민위원회에서 관리하며, 농민에게 분여하여 경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의 전문에서 언급되었듯이 분배 시에는 농민의 노동력과 가족 수에 비례하도록 한다고 하여 각 농가의 경작 능력을 감안하여 분배해 주는 토지의 많고 적음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선공산당의 토지개혁 방안은 모든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점에서는 공산주의 이념에 부합하지만, 각 토지의 경작 단위는 농가가 되어, 여전히 과거와 같은 소농 경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과도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따르면 농업 경영도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는 현실을 고려한 과도기적인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토지의 국유화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농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에는 극단적인 면이 컸습니다.

또한 결의에서는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모두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당시에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문제였습니다. 단적으로 결의가 발표되고 나서 역시 1945년 10월에 조선공산당에 의해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공산당 북조선 5도 당원 및 열성자대회'에서는 지주 토지의 몰수 방침을 비판하고, 일제와 친일파 지주에 한정해서만 토지를 몰수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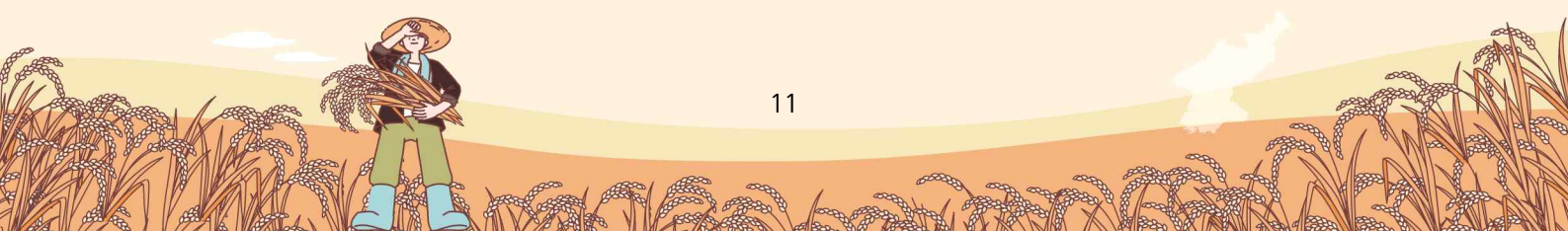
1945년 10월 시점에서 보면, 당시 조선공산당 내부에서도 일관된 방침이 수립되지 못한 가운데 민족주의, 자본주의 세력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농민에 대한 토지 분배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회민주당은 유상매수 방안을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달인 1945년 11월 시점에 가면 국내외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게 됩니다. 1945년 10월 20일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 소련, 중국, 영국의 신탁통치안이 발표되는데, 강대국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북한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있던 소련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상에 차질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1945년 9월~10월에 있었던 런던3국 외상회의에서 소련은 '조선에 관한 제안'이라는 문서를 통해 한반도 신탁통치, 즉 한반도에 대한 4개국 공동 후견을 주장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부산, 제주도, 인천, 제물포 지역을 소련이 군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대륙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제해권을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계기가 된 사건은 1945년 11월에 발생한 '신의주 반공학생사건'이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6개 중학교, 5,000여 명의 학생들이 공산당 타도를 외치며 벌인 대규모 시위였는데, 조선공산당과 소련군의 무력 대응으로 20여 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검거된 사건입니다.



검거된 학생의 일부는 소련 시베리아 지역으로 보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이 사건의 배후에 사회민주당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민주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지주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 속에서 소련은 한반도에서 최대한의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한지역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정부를 통해 토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지주제도를 혁파하여, 반대 정치세력의 입지를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일반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향후 통일정부 수립을 도모하고, 통일정부 수립이 불발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지켜낸다는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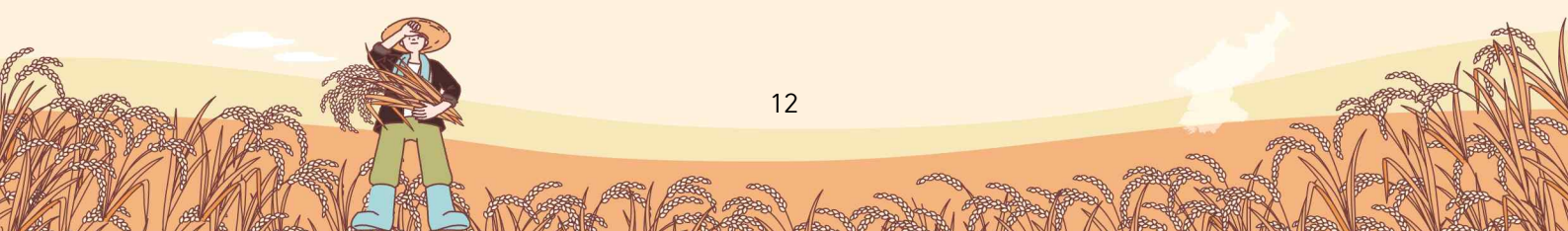
1945년 11월 말 소련군 민정관으로 있던 로마넨코는 조선공산당이 10월에 발표하였던 토지개혁 방안을 토대로 하여 대지주 토지를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토지개혁안을 상부인 연해주군관구에 제출하게 됩니다.

로마넨코는 한국의 지주층을 10~20정보를 소유한 소지주, 20~40정보의 중지주, 40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구분하면서 일본인 지주의 토지와 40정보 이상 소유한 대지주 소유의 토지를 몰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기존 조선공산당의 방안과 같이 몰수한 토지는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적은 농민 및 머슴이라고 불리던 고용농에게 분배하되, 인민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한편, 로마넨코는 농업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현장 조사에 기초하여 토지개혁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책임 있는 당 일꾼을 수장으로 한 조선인 농업전문가, 북조선 각 도의 대표자, 소련의 농업전문가로 구성된 20~25명 규모의 위원회로 하여금 조선의 토지 사용 문제를 면밀히 연구하게 하여, 토지개혁 수행의 기초자료를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로마넨코는 모든 토지개혁 관련 절차는 이듬해 파종이 시작되는 1946년 3월 말 시점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45년 12월에 농업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북한지역의 농가 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평안북도에서 20개의 농촌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5정보 이상의 토지소유자들의 경우,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소작을 주고 있었으며, 3~5정보의 토지 소유자들은 약 41%의 토지를 소작을 주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대체로 토지 소유 규모와 비례하여 소작을 주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지주와 일반 농민을 가늠하게 된 분기점은 5정보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 다만 그러한 기준은 평균적인 양상일 뿐 실제로는 토지소유 면적과는 상관없이 5정보 이상에서도 자작농 또는 부농이 존재하며, 그 이하를 소유한 농가이더라도 소작을 주는 지주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해 당초 로마넨코가 북한지역의 대지주 기준을 40정보 이상 소유자로 정하고, 이들의 토지만을 몰수하는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농가실태 조사는 1946년 2월까지 전국으로 확대되어 실시됩니다.

1946년 2월, 소련의 구상대로 북한지역에 임시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간 토지개혁 방안의 논의 결과를 이어받아서 새롭게 출범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결정서 제2조 2항을 통해 다음과 같이 토지개혁 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최단기간 내에 일본침략자 및 친일적 반동분자에게서 몰수한 토지와 삼림을 정리하며, 적당한 방법으로 조선인 대지주와 삼림을 국유화시키며, 반분소작제를 철폐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여하는 것으로서 토지개혁의 준비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할 것”

이는 대지주 토지의 국유화, 소작제도 철폐, 농민에게 무상분여라는 3대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북한 각 지역에서 농민대회가 개최되는 등 토지개혁에 대한 각 지역 농민들의 토지개혁 청원운동이 일어나는 한편, 임시인민위원회와 소련 군정 당국에서도 구체적인 토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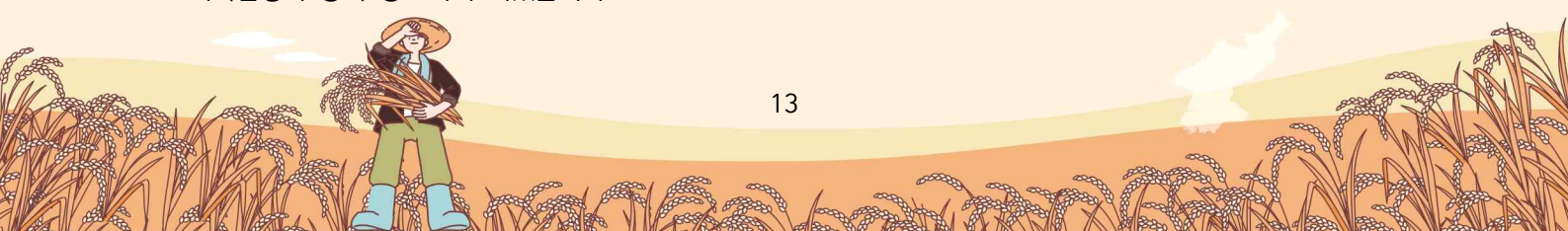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 이 단계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조선공산당과 소련 군정이 농가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5정보 이상 지주 소유지와 소작주는 토지를 몰수 대상지로 확정하는 한편, 몰수한 토지는 국유화하되 농민에게 무상으로 경작권을 부여하는 기존 방안을 주장합니다.

반면, 소련 본국의 외무인민위원부는 10정보 이상 지주 소유지는 모두 몰수하되, 그 이하를 소유한 지주의 경우 일부 토지만 몰수하고, 몰수한 토지는 농민에게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시키면서 대신 소유권 이전의 대가를 장기 연부 상환받는 유상분배 방식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1946년 2월 말에 평양에서 북조선농민대표대회가 개최되어 당초 조선공산당의 토지개혁안에 대한 2차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소련 본국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토지소유권의 귀속 주체를 농민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은 1946년 3월 5일 개최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상정되어 찬반 토론을 거치게 되었는데, 일부 위원들이 1차 토론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지주 소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는 방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토지개혁이 자칫 사회주의혁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지주의 토지는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개혁이 자본주의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봉건체제의 근절에 목적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결국 임시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법령이 채택되어 바로 다음날 1946년 3월 6일자로 토지개혁령이 공식 공포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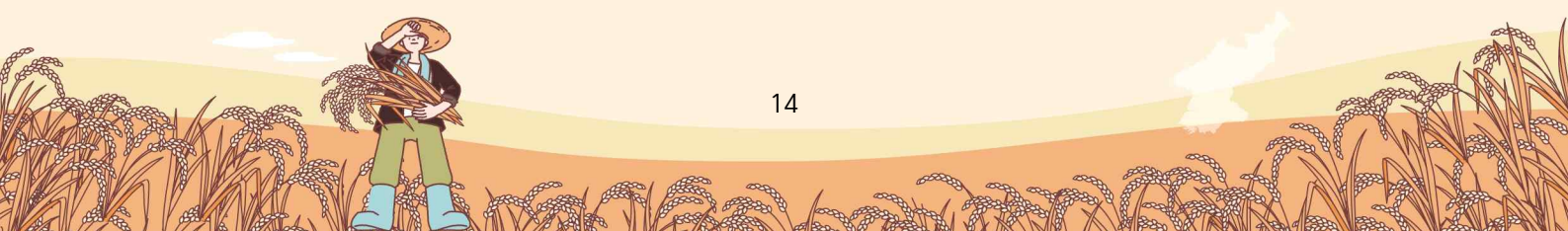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북한지역에서는 5정보 이상의 지주 소유지와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무상몰수, 무상분배, 단 분배는 경작권만이 아닌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토지개혁이 개시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토지개혁 법령의 제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946년 3월 6일자로 토지개혁 법령이 공식적으로 공포되어, 5정보 이상 지주 소유지와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의 무상몰수와 농민에 대한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이 전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남한에서는 토지개혁 방식을 두고 여러 정치세력 간에 합의 과정이 지난하게 진행되면서 1949년에 가서야 비로소 개혁의 실시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신탁통치 반대 운동과 반공운동 분위기에서 북한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임시정권을 수립한 후 토지개혁을 통해 민심을 얻으려는 소련 당국의 의도가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토지개혁의 실시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북한의 토지개혁 : 실시 과정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토지개혁 법령의 제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개혁의 실시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1946년 3월 토지개혁 법령의 실시와 함께 전격적으로 북한지역에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 몰수와 분배에 이르는 토지개혁의 전 과정을 불과 1개월여 만에 완료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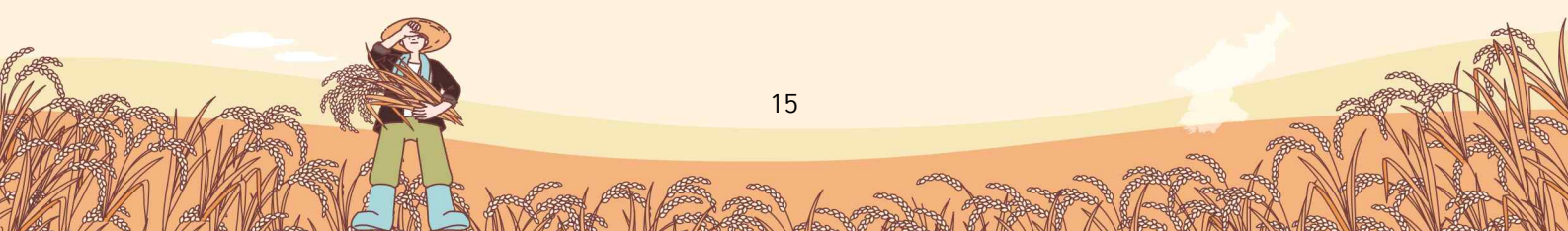
먼저 토지개혁 과정에서 몰수된 토지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몰수한 토지의 총면적은 100만 8,000여 정보 가량으로서, 북한 전체의 농업용 토지 면적 182만 정보의 약 55.4%에 해당하는 토지가 몰수되었습니다.

논과 밭의 구분에 따라 몰수토지와 총면적을 비교해보면, 논은 전체의 72.1%인 28만 9,000여 정보가 몰수되었으며, 밭은 51.6%인 69만 1,500여 정보가 몰수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942년 시점에서의 북한지역의 소작지 면적 비중이 논은 64.3%, 밭은 49.6%라고 살펴보았는데, 몰수된 토지 면적의 비중이 이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토지개혁이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몰수된 토지 100만 8,000여 정보 중에서 당초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11.6%인 11만 정보 가량에 불과했으며, 5정보 이상 지주의 토지도 23.7%인 23만여 정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지역에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지주 계층이 남한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이들의 토지만을 몰수해서는 농민에게 충분한 몫의 분배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몰수한 토지는 '전부 소작주는 자의 토지', 그러니까 소유한 토지가 적어서 5정보 이상 지주층에 해당하는지는 않지만, 자신의 토지를 직접 농사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는 자와 그리고 '계속적으로 소작주는 자의 토지', 즉 일부 토지를 소작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소작계약이 계속 이루어진 토지,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직접 농사짓지 않는 토지로부터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경하지 않는 토지로부터 상당수가 충당되었던 것입니다.

토지 몰수 과정에서 일부 지주 계층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공산당 위원회 건물에 수류탄이 투척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안남도에서는 강서군 위수사령부 건물 옆에 있는 이층집에 방화사건이 발생하였고, 강동군에서는 지주들이 모의하여 토지개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읍 경찰국장을 구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황해도에서는 토지개혁 실시에 반대하여 해주 지역의 200명의 중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주가 토지개혁 실시 이전에 미리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여 '애국지주'로 인정받아, 토지개혁 과정에서 5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에게는 농기구 등을 몰수하였지만, 이들 애국지주에게는 농기구를 몰수하지 않았던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토지개혁에 대한 지주층의 반발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으로는 첫째, 당시 남북 분단의 요건이 작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지주는 소련 주둔군에 저항하기보다는 차라리 남한 지역으로의 이주를 택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토지개혁의 시점에 지주층이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방 직후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들에 의해 지주가 민족반역자로 인민재판에 회부되었는가 하면, 지역 인민위원회가 친일파 지주의 재산을 몰수하였던 사례가 있었으며, 그간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신의주 반공학생사건과 같은 반공운동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였던 지주 계층이 상당수 진압되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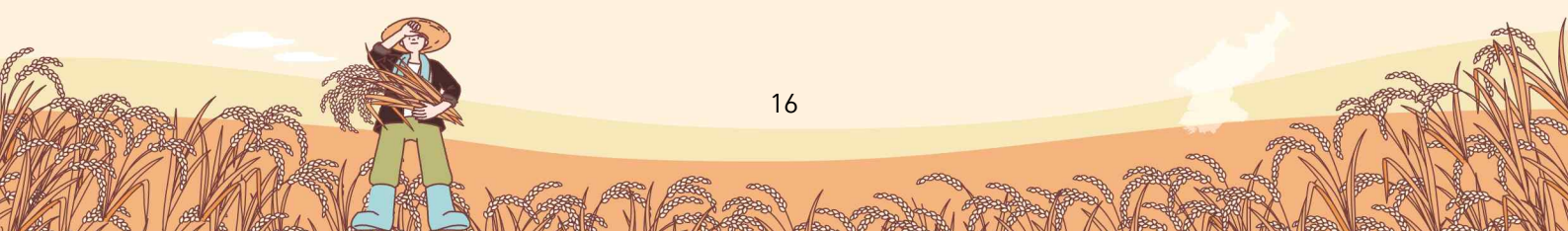
셋째, 토지개혁 과정에서 농민들이 조직화되면서 지주층을 압도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 농촌지역에서 토지개혁의 실무 과정을 담당했던 조직은 농촌위원회였는데, 농촌위원회는 열성적으로 활동하던 빈농, 소작인, 농업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20만 명에 가까운 농민이 참가하여 11,930개의 농촌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농촌지역마다 청년 농민으로 이루어진 농민자위대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개혁 과정에서 농민들이 조직화되면서 지주 계층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토지개혁의 실시로 권력의 중심이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층, 민족주의, 자본주의 진영으로부터 농민층, 사회주의 진영으로 이동하게 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몰수한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실제 경작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원칙하에 각 농가의 노동력 수준을 점수로 평가하여 점수에 따라 부여하는 면적을 정하였습니다.

토지개혁 법령에 관한 세칙에 점수표가 나와 있는데, 남자의 경우 18세부터 60세까지, 여자의 경우 18세부터 50세까지는 완전한 농업 노동력으로 평가하여 1점을 부여하고, 남녀 15세부터 17세까지는 0.7점, 그 외의 연령대의 경우 농업노동 가능 여부에 따라 0.4점, 0.3점, 0.1점을 부여하였습니다.

토지분배의 결과 72만 4,500여 호의 농가가 평균 1.35정보씩의 토지를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토지개혁 결과 각 도별 농가의 평균 소유 규모를 보면 상당한 편차가 있었습니다. 함경남도와 황해도가 각각 호당 1.8정보 정도를 소유하게 되어 가장 평균 규모가 컸으며, 이에 비해 강원도는 1.23정보에 불과하여 가장 평균 규모가 작았습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은 토지분배를 각 리 단위로 실시하였기 때문인데, 토지의 총면적에 비해 농가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평균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처음부터 인구가 과밀한 농촌지역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토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농가의 노동력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를 받았다는 점과 함께, 북한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농가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여전히 불균등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개혁 후 북한 농가의 경작 규모를 살펴보면 3.5정보 이상 소유한 농가가 전체의 6.3%, 0.5정보 미만을 소유한 농가가 전체의 10.7%를 차지하는 등, 양 극단의 농가가 여전히 일정 정도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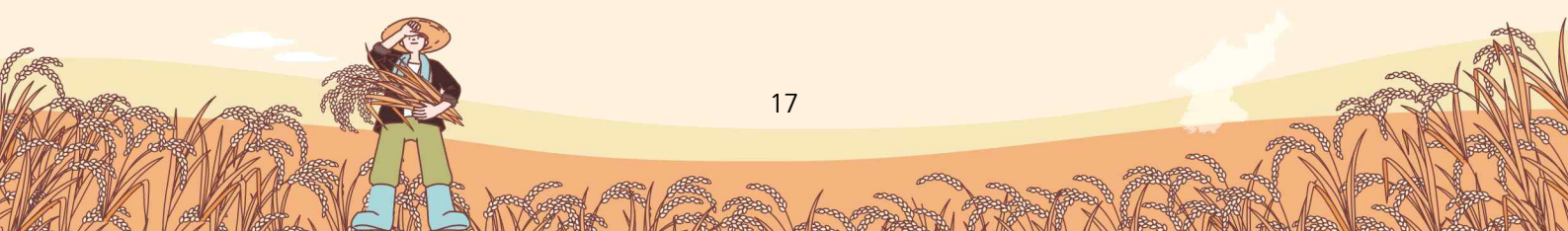
그러나 참고삼아 남한에서 농지개혁이 실시된 후의 모습과 토지개혁 직후 북한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토지 소유의 불균등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1정보 이상의 농가 비율이 대종을 이루었던 반면에, 남한의 경우 농지개혁 후 0.5정보 미만의 농가 비율이 42.7%, 0.5에서 1정보 소유 농가가 35.8%로서 하위 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북한의 토지개혁이 남한보다 더 철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다만 북한지역의 경우, 남한보다 경지 면적이 넓은 데 비해 인구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개혁 후에 북한 농민이 보다 중간 계층을 두텁게 형성할 수 있었다는 사정도 감안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토지 소유만으로 각 농가의 경제 수준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 토지가 적지만 소규모 가족에 비해 생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풍흉 여부를 불구하고 식량이 부족한 농호를 빈농으로, 풍년에는 자기 식량이 되고 흉년에는 식량이 부족한 농호를 중농으로, 풍흉 여부를 막론하고 자기 식량이 남아서 팔수도 있고 빚놀이도 할 수 있는 농호를 부농으로 분류하여 농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통계는 1950년대 말 농업협동화가 완료된 후의 조사 자료가 알려져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62% 정도가 중농으로 분류되어 토지개혁이 농민들의 경제적 수준을 대체로 일정하게 하는 데 기여했음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경우, 농업협동화로 인해 각 농가의 토지를 모두 공동경영을 위해 출자한 이후 상태에서 조사된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 규모 정도가 농가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된 내용이라는 점에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토지개혁은 법령상의 원칙에 따르면 무상분배 방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토지를 분배 받은 농민이 현물세를 납부해야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상분배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북한과 소련 당국은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당초 몰수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방침에서 후퇴하여, 농민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소유권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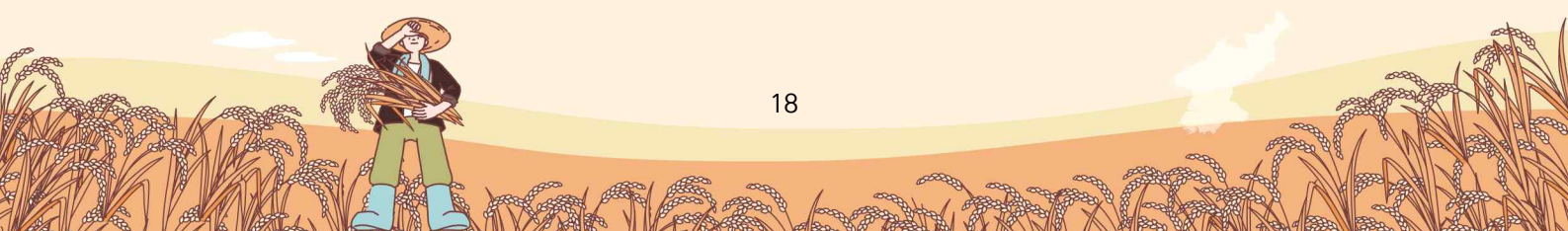
1950년 1월 북한 당국이 내각결정으로 채택한 '토지행정에 관하여'라는 문서를 보면, 토지개혁 이전부터 본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매매와 양도가 가능했지만, 토지개혁 결과 분여받은 토지는 매매, 양도, 저당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분여지는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농사를 짓는 동거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동거가족 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인민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환된 토지는 토지가 적은 다른 농민이 경작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1946년 토지개혁 법령 제정 시에는 농민에게 소유권이 부여되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조치를 통해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토지의 전인민적 소유, 즉 국가적 소유를 지향해 가도록 제도가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남한의 경우, 분배 토지를 받은 농민이 매매, 양도, 저당 등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대대적인 농업협동화 운동을 벌이면서, 토지개혁의 결과 각 농민에게 부여된 토지 소유권, 이마저도 제한적인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만, 이러한 소유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농업협동화 운동의 결과는 사실상 오늘날까지도 북한 농업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농지소유 제도로써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농업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농업협동화 운동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북한의 농업협동화운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50년대 전개된 북한의 농업협동화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북한지역에 친소정권을 조속히 수립하기 위해 농민의 민심을 확보하고자, 북한의 토지개혁은 당초 국유화 방침에서 후퇴하여, 농민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종의 현실적인 타협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제도를 통해 이와 같은 소유권에 일정한 제약을 부여하면서 점차 국토의 전인민적 소유라는 최종적인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 농업 부문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 농업협동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협동화운동이 마무리되자 농민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여,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기본적인 농지 소유제도로써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협동화의 내용과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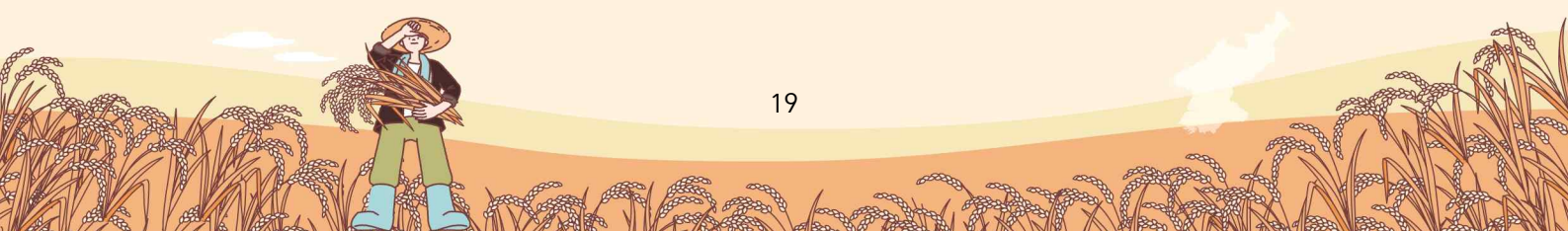
북한지역의 경우 농업협동화를 통한 집단농장을 이미 건설한 바가 있는 소련의 선행 사례와 달리 농촌 공동체의 전통이 미약하고, 전통적으로 농민들이 사적인 토지소유자로서 독립성이 강한 조건에서 이들의 경영, 나아가 소유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개혁 이후 한국전쟁이 개시되면서 농업 증산이 필요해지자 북한 당국의 주도하에 개별 영세농들을 조직화한 생산반의 운영, 소거리, 품앗이 등 공동노동을 장려한 경험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해 빈농층이 확대되었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농업 협동화를 요구하고 있었고,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 역시 농업협동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토지개혁을 완수하여, 아직까지 농민들의 토지 소유에 불균등한 측면은 여전하였지만, 부농이 영향력이 미미하고, 대체로 비슷한 규모의 농민으로 재편되었다는 점도 유리한 요소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1949년부터 소련 및 동유럽 사례를 연구하여 농업협동화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 이들 선행 사례와는 차이를 갖는 방식을 마련하게 됩니다. 북한의 농업협동화 방식을 소비에트형이 아닌 인민민주주의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한의 농업협동화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농업협동화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농촌 지역단위로 농민들의 경영과 소유관계를 조직화하는 농업협동조합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협동조합은 공산주의의 궁극적 목표인 생산수단의 전인민화를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닌이 마지막으로 남긴 논문이라고 알려진 '협동조합에 관하여'도 농업 부분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수하기 위해 협동조합이라는 과도기적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인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 북한 당국은 이를 목표로 한 세부적인 3개의 단계가 있음을 상정하였습니다. 각각 농업협동화의 제1형태, 제2형태, 제3형태가 그것입니다.

농업협동화의 제1형태는 '농촌노력협조반'입니다. 재래의 품앗이반, 소거리반이 대체로 임시적인 공동 노동력 조직으로서 구성원이 유동적인 3~5호 정도의 농가로 구성된 상호부조조직인 반면에 농촌노력협조반은 구성원이 고정적인 10호 정도의 농가로 구성된 상시적인 농촌 상호부조조직으로 구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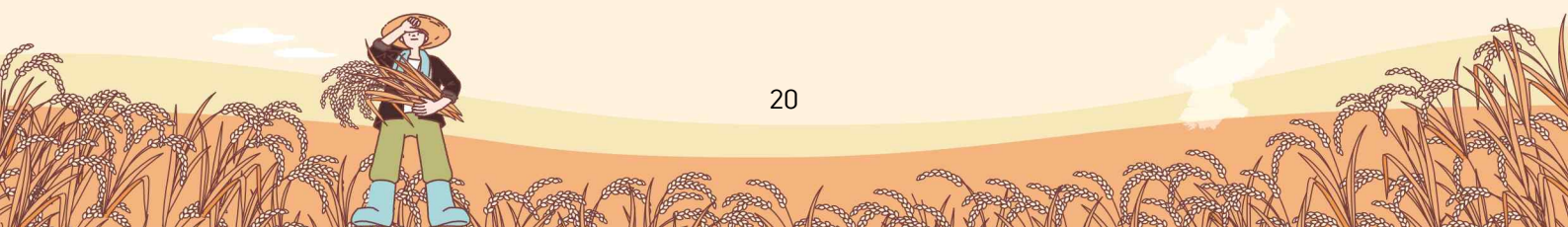
구성원들은 밭갈이용 소와 같은 역축과 농기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밭갈이, 파종, 이앙, 제초, 추수, 탈곡에 이르는 일련의 농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농촌노력협조반에 속하더라도 기존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그대로 경작하게 되며, 따라서 토지 간의 경계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 작업이 필요한 농사일만 서로 도와서 수행할 뿐 각자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에서 수확한 산출물은 온전히 본인의 몫으로 되게 됩니다. 축력과 농기구 역시 소유권은 각자에게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되, 이용에 대한 대가는 관습에 따라 현물 또는 노동력으로 서로 갚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제1형태의 경우 본격적인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개인의 소농 경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개별 소농 차원에서는 조달이 어려운 축력, 농기구를 공동 이용하고, 계절적으로 필요한 공동노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협동화의 제2형태는 토지와 생산 도구들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자산으로 통합하고, 농작업도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때 각 농민들은 자신이 출자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수확물에 대한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노동에 참여한 노동 일수에 따라서도 수확물에 대한 분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신이 출자한 토지 면적과 노동력 제공 일수만큼 분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협동경리가 고도화된 형태로서 상정된 제3형태는 농민의 분배가 오직 해당 농민이 제공한 공동노동에 대한 노력 일수로만 결정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출자한 토지의 많고 적음이 최종적으로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각 농민의 개별적인 토지 소유권은 더 이상 실질적인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제2형태와 제3형태의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농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호하는 형태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보유한 토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농의 경우 제2형태를, 토지가 적은 빈농의 경우 제3형태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미 토지개혁을 실시했지만, 각 농가의 노동력 수에 따라, 그리고 소작을 주지 않고 고용노동에 의해 경작하는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서 제외해 주었기 때문에 농민들 간에 토지 소유 격차가 존재하였는데, 따라서 협동조합 결성과정에서도 농민들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농업협동화가 마무리되는 1950년대 말에 이르면 북한 전역의 100%, 즉 모든 지역이 제3형태의 농업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1954년부터 농업협동화 운동이 시작되는데,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앞서 설명드린 농업협동화의 3가지 형태 중 어떠한 형태로 농업협동조합을 결성할지는 각 지역 농민들이 스스로의 의사와 그 지역의 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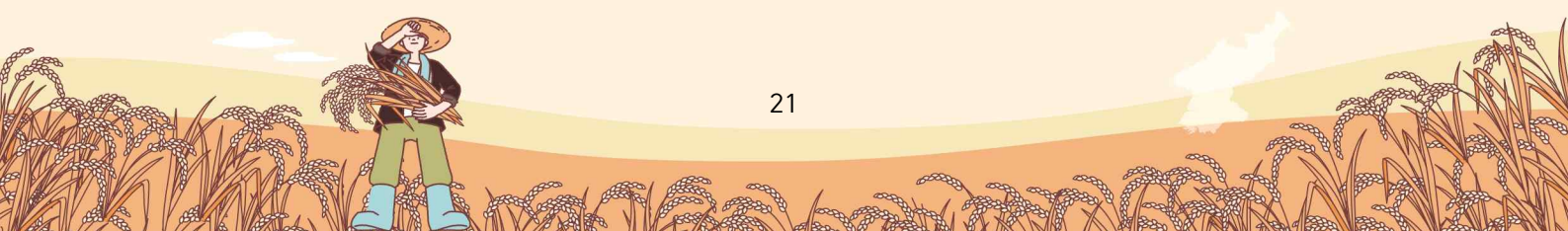
조선공산당 농업부장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원하는 형태는 제2형태이며, 자신도 북한 농민들의 실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2형태가 당연하고,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당 간부 간에는 가장 협동화 단계가 고도화된 제3형태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비판하면서 조합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농민들의 자원적인 요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업협동화운동이 개시된 이후를 보면, 제1형태로 결성한 사례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으며, 처음 1년간은 제2형태가 46%, 제3형태가 54%로 제2형태를 선택한 비중이 상당히 존재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제3형태의 농업협동조합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태로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협동화운동이 개시된 지 2년 정도 된 시점인 1955년 12월 시점에서 제3형태는 전체 농업협동조합의 92%를 차지하여 90% 선을 넘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면서 최종적으로 농업협동화운동의 종료를 선언한 1958년 말에는 전국 모든 농촌지역이 제3형태의 농업협동조합 13,000여 개로 조직화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초 북한 당국의 예상과도 달리 모든 농업협동조합이 제3형태를 취하게 된 데에서 당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영향이 미쳤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국가와 농민 간의 강한 결합 관계,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농민들의 열의, 남북한 간 체제 대립 속에서의 사회적 긴장 등이 지적되는 한편, 토지개혁의 결과 다수의 농민들이 대체로 소유 조건에 큰 차이가 없었던 배경도 한 요인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부농층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3형태로 조직화를 완성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당국의 지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 당국은 농업협동화를 보다 공산주의 이상향에 가까운 제3형태로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농민 조직화 과정에 개입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빈농 중심의 정책노선을 전개하면서, 먼저 빈농 중심으로 제3형태의 농업협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하고, 이후 조직화 과정에서 소외된 부농층이 마지못해 조합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유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발간한 문헌에 여러 지역에서 펼쳐진 농업협동화에 대한 저항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개 빈농들과 조선로동당원이 적극적인 협동화 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가운데, 부농과 옛 지주 출신 농민, 그리고 농촌 촌락 내의 동족 집단의 저항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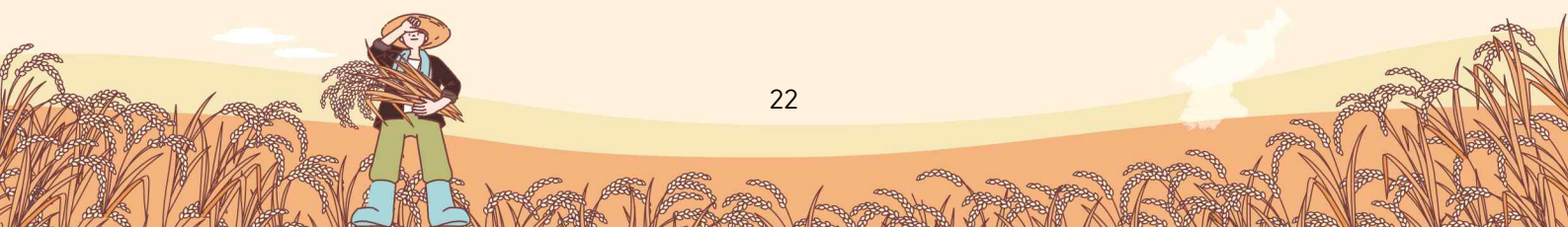
사회적 분위기하에서 협동조합에 참여하더라도, 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농민들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농업협동화운동이 개시되기 직전인 1953년 말에 북한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역축 도살 및 방매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1953년 8월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농업협동화에 대한 내부 방침이 확정되고, 시범적으로 몇몇 지역에 대한 협동조합 설치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알려지면서 소를 도살하여 식용으로 하고, 소의 사육을 게을리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어차피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소를 조합의 자산으로 출자하게 될텐데 그럴 바에는 당장 식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소뿐만 아니라 토지의 경우에서 협동조합에 출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를 텃밭으로 돌리는 일도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북한 문헌의 표현이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농민들은 조합에 들어오면서도 이중 경리를 꿈꾸고, 토지와 로력자의 일부를 남겨 두거나 조합 규약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더 많은 터전을 경작하려 하였으며, 또 극히 부분적인 현상이기는 하였으나 역축의 출자를 기피하거나 큰 소를 팔고 작은 소를 사서 조합에 출자하는 등 사실들도 있었다.”

협동조합에서 농민들이 대규모로 탈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배천 바람’이라고 알려진 사건인데, 1956년 가을에 조합 결산 분배 직후부터, 1957년 초까지 발생했던 황해도 일대 농민들의 대규모 조합 탈퇴 사건이었습니다. 황해도 배천 지역은 북한지역의 대표적인 농업 곡창지대로서 쌀농사를 중심으로 과거 지주제가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옛 지주 출신을 비롯한 이 지역 부농들은 농업협동화정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당시 북한 당국에 내던 농업현물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합에 가입했다가 일제히 탈퇴해 버린 것입니다.

당시 조합의 규약상 탈퇴가 자유로웠고 탈퇴 시에는 토지를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황해남도 당위원장이 비판을 받고 숙청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과격한 저항행위들도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평안남도에서는 농업협동조합에서 화재가 4개월간 97건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고, 소 사료에 누군가 독을 풀어서 소 5마리가 독살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농업협동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장애 요인은 전통적으로 농촌 촌락 사회에 존재하였던 동족 질서였다고 합니다. 촌락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2개 이상의 동족 집단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이 단일한 조합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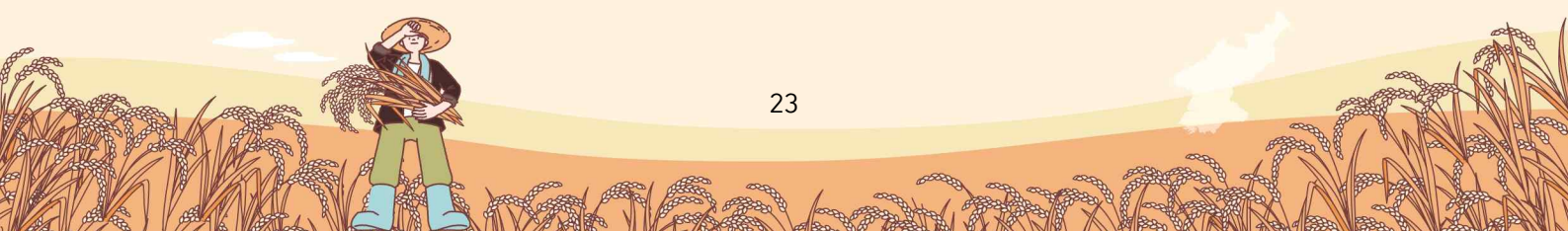
예컨대 함경남도 북청군의 한 리에서는 동족별로 7개의 조합이 결성되었는데, 이들을 1개의 조합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성이 한데 모여 일이 잘 될 수 있겠는가?', '간부는 어느 마을에서 나는가?', '재산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동조합 통합에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농업협동화운동을 추진하면서 전통적인 촌락 질서를 재편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1955년 이후 조선로동당에 의해 집중지도를 실시하여 기존에 농촌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또 협동조합의 간부로도 상당히 진출해 있던 농촌 유지와 전통적인 가문 원로를 배제하고, 새로운 핵심층으로 지도층을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전쟁 이후 대규모로 생겨난 군인들을 제대시킨 후 이들을 대거 귀향하도록 하여 협동조합 간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게 됩니다. 이 시기 북한 인민군의 수를 보면 약 8만 명이 감축되었다고 하며, 이들이 각지 농촌에서 협동조합 간부로서 기존의 전통적 촌락 질서를 재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농업협동화운동은 생산 관계상의 대변혁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적 변혁이기도 하였습니다.

부농, 중농 상층, 문종의 연장자 등 지방 유력자층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촌락 질서가 빈농을 비롯한 사회주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체되었으며, 능력 있는 여성과 청년들도 협동조합의 간부로서 활약하게 됨으로써 남성과 연장자 중심의 가부장제적 질서가 무너지고, 여성과 청년층의 발언권이 상승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 변화가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화운동은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와 무관하게 연간 노동 일수에 따라 분배받는 형태의 공동농업경영방식을 전체 농촌의 기본적인 생산 관계로 규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농업의 경직성을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후 농민들은 공동경영을 하는 협동조합 경영보다도 자신이 온전히 수확량 전부를 가져갈 수 있는 텃밭 경영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협동조합의 농자재를 빼돌려서 자신의 텃밭에 투입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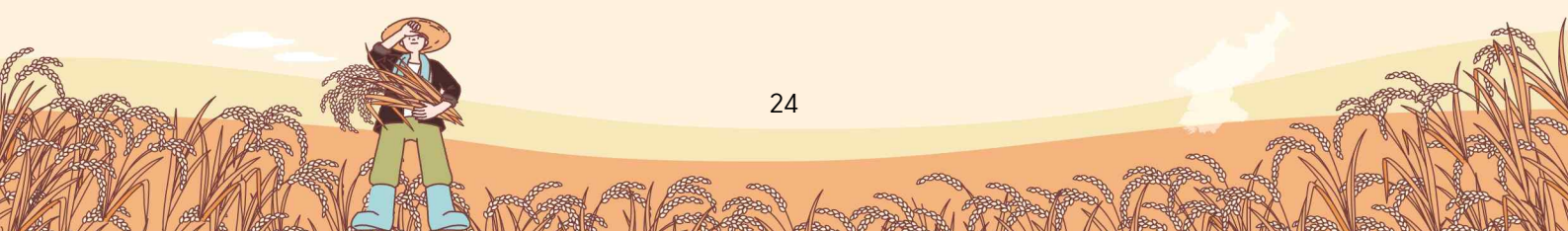
북한 당국 역시 중국의 사례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생산 단위를 작업분조, 포전담당책임조로 세분화하여 최대한 개별 농민에 대한 보상이 노력에 일치하도록 하는 개혁조치들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농업협동화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더 부연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협동화운동의 결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은 1962년에 협동농장으로 이름이 바뀐 채로 기본적으로 당시의 구조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민들이 조합에 가입하면서 출자했던 토지는 북한 법령상 협동적 소유라고 하여 협동농장의 토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국유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 협동농장을 통합하고 토지를 국영화한 국영 종합농장의 건설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어 국유화로의 진전을 보기도 하였지만, 북한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러한 방침이 중단된 지도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던 탈북민을 조사해보면 농경지를 국가 소유의 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협동적 소유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북한에서 농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국가로부터 부여된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치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업협동화의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법적 형식으로서 협동적 소유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협동화의 관념은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북한의 농업> 첫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북한의 농업 현황과 제도를 소개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1

**Early Condition of North Korean Agriculture:
Land Reform and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1-1

The Status of North Korean Agriculture after Liberation

Hello, everyone. I am Sunghnam Kim and I will give a lecture about, "North Korean Agriculture." North and South Korea share the same ethnicity, and both pursue unification. In reality, however, military conflict often occurs between them as they consider each other the main enemy, leading to strained relat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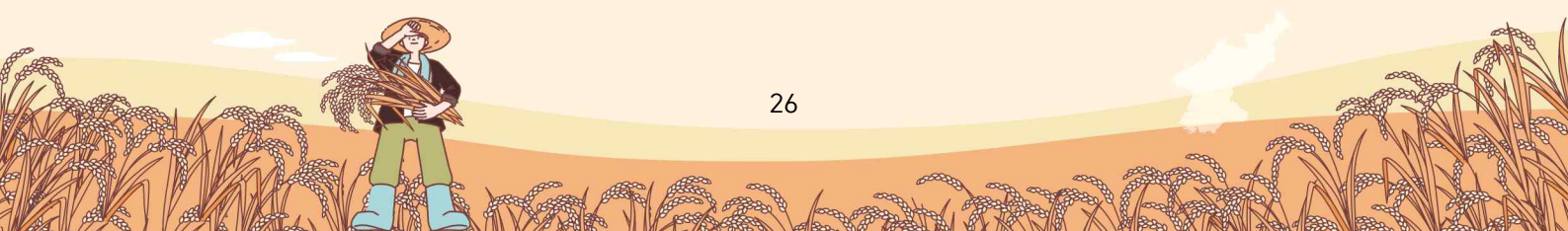
South Koreans have much interest in North Korea, and news about the North makes headlines on the nightly news programs. Still, the attention seems to focus only on its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Concerning South Korean history of economic growth, North Korea carries a meaningful significance. Before the division of Korea by the Korean War in 1950, North and South Korea had been a homogeneous nation for more than 1,000 years. But after the Korean War, the peninsular was divided into two, one capitalist and the other communist country.

South and North Korea present an intriguing subject to scholars of economic history as it shows the difference two countries in similar conditions make in economic achievements after they each adopts a different system. Therefore, to better understand Korea's economic growth, it is important to know how North Korea has ended up 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This lecture will focus on North Korea's agriculture, among various aspects of North Korean economy. I will explain why agriculture is chosen as the subject.

To develop a country's economy into an advanced on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precondition of its development is an improvement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With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vity, labor and capital invested in agriculture can go to the manufacturing sector.



In South Korea's case, during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and 1970s, the government nurtured the manufacturing industry, such as the heavy chemical one. Still, at the same time, it promoted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on. For example, in the early 1970s, Tongil rice, a new rice variety, was developed, and with this, the country could be self-sufficient in its staple.

As a result, national capacity could be put more into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a manufacturing-centered growth strategy could be pursued more efficientl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look into a country's experienc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is sense, this lecture series will discuss the agricultural sector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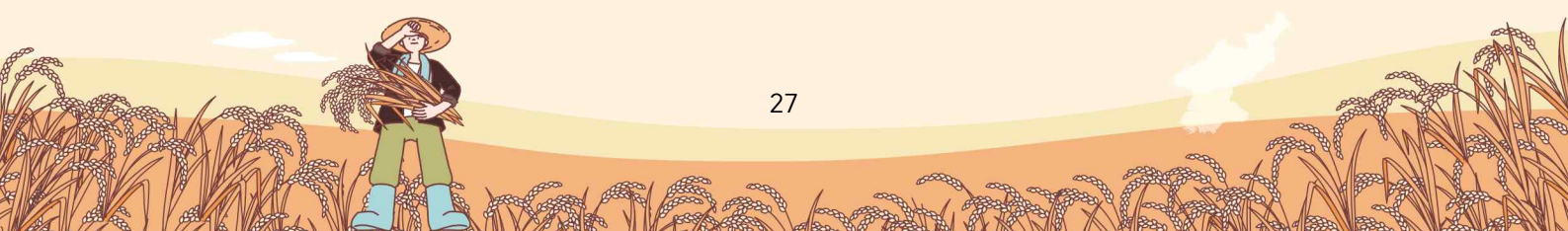
This lecture series' main subject is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covers specific topics as follows. The first one will examine land reform an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from the 1940s to 1950s, which was the basi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agricultural system. The second and third lectures will explore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focusing on the related institutions and their operation.

The fourth lecture will discuss North Korean agricultural financing and its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to understand its economy better. In the fifth lecture, with North Korea's potential reform and openness in mind, we will look into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s that can be pursued for North 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Lastly, the sixth lecture will deal with an issue of change in the North agricultural system, which is the fundamental way for its agricultural development, by referring to the Chinese case.

This lecture series covers many aspects of history and institutions of North Korea when dealing with details, technical terms will come up. To better understand each lecture, I hope you will fully use the reference materials to understand each lecture better.

Today's lecture, the first of the six, deals with the subject, "The Early Condition of North Korean agriculture: land reform and agricultural cooperation movement."

We will explore land reform in the 1940s, when the basic system for North Korean agriculture was established an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of the 1950s.



Similar to the South, land reform of the North, which is called farmland reform in South Korean law, replaced the landlord system that lasted until the colonial period with the owner-farmer system. Thus it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oday's farming system.

The concept of the landlord system is a legal concept where land can be owned by a person who does not farm himself and he is allowed to tenant farming. Regarding the economic aspect, the absentee landlord gains the upper hand in land ow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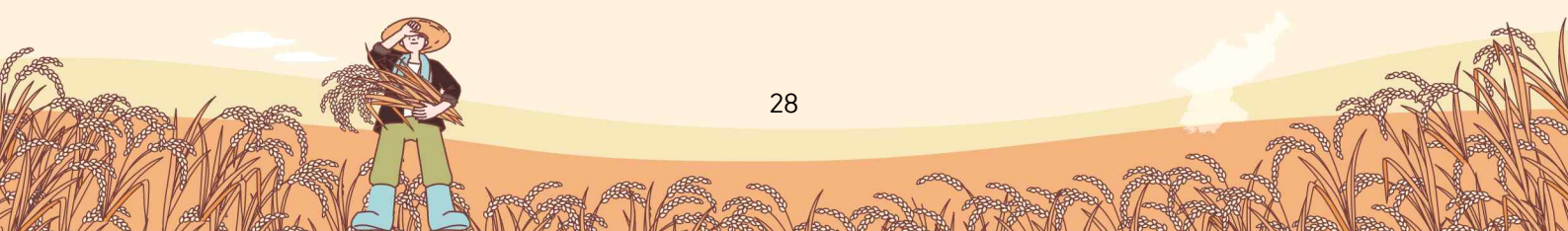
As a result of land reform or farm land reform, the absentee landlord who does not farm is prohibited from owning farmland and today's system was established which grants only tillers the land ownership.

Article 121 (1) of the South Korea' Constitution states, "The State shall endeavor to realize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for agricultural land. Therefore, tenant farming shall be prohibited." It shows that, in principle, those who do not farm are not allowed to own farmland. Recently, a case of illegal speculation of farmland caused a stir in South Korea due to the violation of the law.

People are not allowed to own land if they do not farm themselves. But the land is planned to be developed. In that case, outsiders purchase farmland by falsifying documents that they will do farm to gain development profit or the compensation price of land expropriation in public development projects. The fact that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is still stipulated in the law means the landlord system negatively affects the economy and society.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re was much discussion on land reform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e basis of the North Korean agricultural system was established during such a discussion. Now, we will examine the background of North Korean land reform by tracing the process of its land ownership.

For a starter, we will overview the landlord system by following the change in the percentage of farm households by the farming type. In 1915, early in the colonial period, 21.7% of farmers owned their farmland nationwide while 35.9% were without, and 40.9% owned some land and at the same time worked in tenanted farming.



The landlord system is something familiar but an extension of the practice of the late Joseon period, where the owner and peasant split harvest fifty-fifty. While the ruling class or successful farmers increased their land, they lent some to farmers who needed land, and the harvest was split fifty-fifty. In 1915, a great number of farmers were tenants, and those who farmed their land accounted for only 21.7%

After colonial rule, such a land ownership remained the same. Rather, Japan made landlords their partners in its agricultural administration, which aimed to turn Joseon into a rice production base for imperial Japan.

The plan to increase rice production in 1920 was part of the administration. In the 1930s due to the Great Depression, the economic status of small farmers deteriorated and Japan saw surplus rice production. This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Japanese agricultural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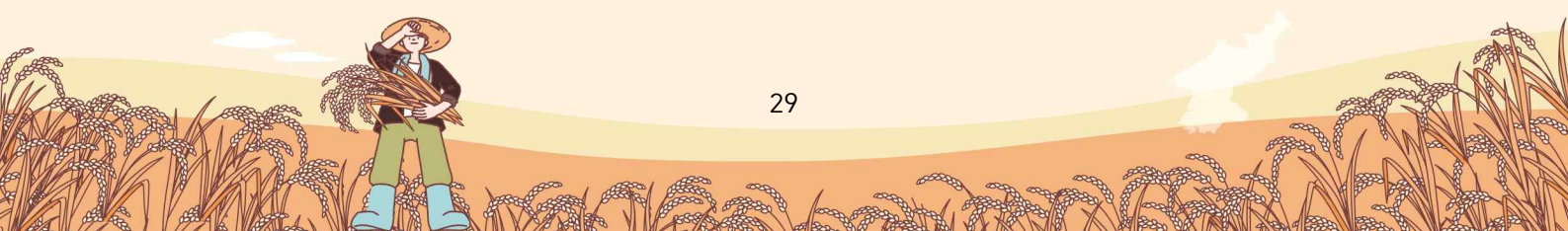
Cases in point are the enforcement of the Farmland Law in Joseon and a project of allocating land to tenants pursued by Japan in the 1930s. But they were not enough to bring a sweeping change to farmland ownership.

Therefore, in 1941, just before the liberation, only 17.8% of farmers tilled their own land. As for tenant farmers, the rate rose from 35.9% in 1915 to 53.6% in 1941.

Consequently, the landlord system remained reinforced and resolving the problem became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Koreans should deal with after liberation. That trend of the landlord system is often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population growth during colonial rule.

During the colonial rule period, the population grew steadily. However, due to the Japanese's industrial policy based on agriculture, the pressure of the increased population was on agricultural sector as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not mature enough to absorb it.

Let us look into the landlord system by region. A comparison of the tenant land rat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1943 shows the following. When the entire land is divided into rice paddy and dry fields, 69% of the South's land was rice paddy, while 64.3% of the North shows similar numbers.



At the time, rice was cultivated for commercial purposes rather than self-consumption. Therefore rice paddy was more attractive than dry fields for landlords. Thus the rate of tenant paddies recorded high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As for dry fields, the rate for the South was 63.1% and 49.6% for the North. In the south, the tenant rate for dry fields was similar to that of rice paddy, but in the North, the tenant rate for dry fields, which were not commercially attractive, needed to be higher. This is partly because the land of the North was barren and thus its dry-fields productivity was 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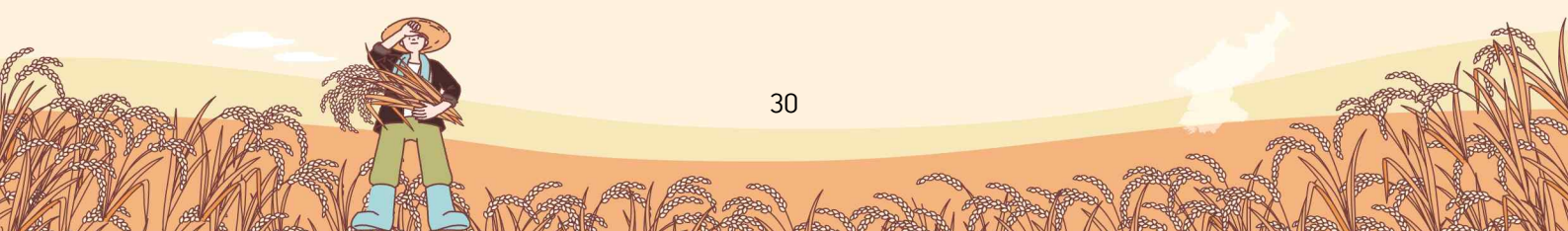
In sum, the landlord system in North Korea was developed based on rice paddy. However, as shown in the table, the rice paddy of the entire land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South, which means the landlord system did not prevail compared to the South.

This can be applied to Korea's comparison of farm households by the farming type in South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data in 1942, the rate of farmers tilling their land in the South was 13.8%, while that of the north was 26.2%. As for tenant farmers, the rate for the South was 57.6% while 45.7% for the North. In short, the landlord system during the colonial rule prevailed more in the South where rice-based farming was developed.

Consequently, land reform started earlier in the North than in the South. After liberation, a fierce discussion took place on abolishing the landlord system and establishing land ownership one based on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on both sides. It was not about the system but escalated into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After liberation, North Korea was ruled by the Soviet military government and political power adopting socialism played a leading role in government establishment. With this, the fact that the landlord system was not dominant as much as the South explained why the interest of landlords was hard to be protected in public discussion. I have shown the different situations of the North by comparing them with that of the South.

Of course, in the North, there were discrepancies in the development of the landlord system by region. In Hwanghae province and North and South Pyeongan provinces where rice is predominantly produced, the landlord system was developed as much as that of the South.



In 1942, a look into the percentages of farming households by the farming type of six provinces of North Korea showed as follows: in Hwanghae province 15.4% of farmers were yeomen, and 58.8% were tenant farmers, similar to South Korea with 13.8% and 57.6%, respectively. In North and South Pyeongan province, the percentage of yeomen was higher than that of South Korea but the percentage of tenant farmers was over half, which means the landlord system prevailed t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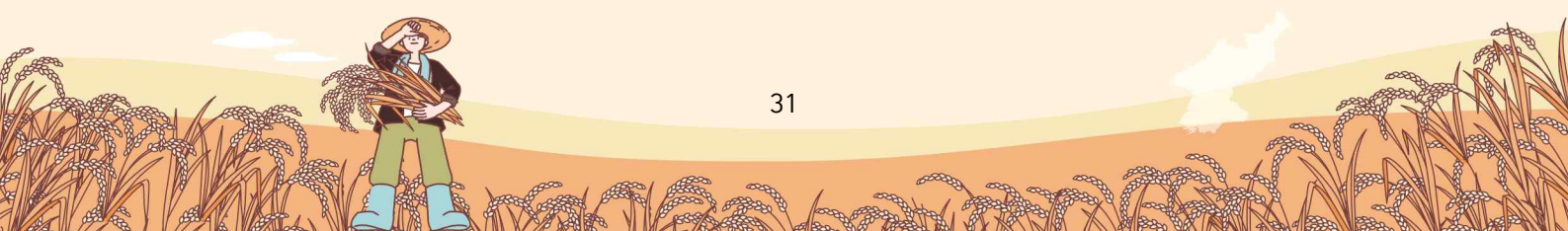
Meanwhile in North and South Hamgyeong provinces northeast of the peninsular where land was barren and dry-field farming prevailed, the percentage of tenant farmers was significantly low. In South Hamgyeong province, the percentage of tenant farmers was 28.3% and in North Hamgyeong province 18.4%. But it is known that the landlord system in North and South Hamgyeong provinces was rapidly developed during colonial rule.

According to study on South Hamgyeong province with 1917 numbers as the base with 100, as for yeomen, the number for 1927 was 90 and in 1932 fell to 71. As for tenant farmers, the number for 1927 was 106 and in 1932 it rose sharply to 188. This means that the number of tenant farmers rose nearly twice during the same period.

Therefore the study concluded, although the landlord system of South Hamgyeong province did not develop as much as that of other provinces it saw the collapse of peasantry. As a result, a drastic tenant-farmer movement took place.

So far, we have examined the trend of the landlord system in North Korea before liberation, which led to the North's land reform. Shortly after liberation the expansion of landlord management took place across the peninsular. In the north the landlord system developed focused on rice paddy. By region, in the west areas such as Hwanghae and North and South Pyeongan provinces the landlord system prevailed.

In these circumstances the Soviet military government and socialists that ruled North Korea carried out land reform rapidly and in 1946 the reform was launched and the landlord system was abolished in a short time. This will be further discussed next time.



1-2 Land Reform of North Korea: Enactment of Law

Hello everyone. Last time we explored the status of North Korean agriculture after liberation. Today, we will look into the process of implementing land reform in North Korea.

North Korean land reform began in March 1946 with the proclamation of law and it took only one month to be completed. It began earlier and was completed shorter than in South Korea. It was due to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situation and ways of land confiscation and distribution between the two Koreas.. With this in mind, let us look into the process of enacting law on land re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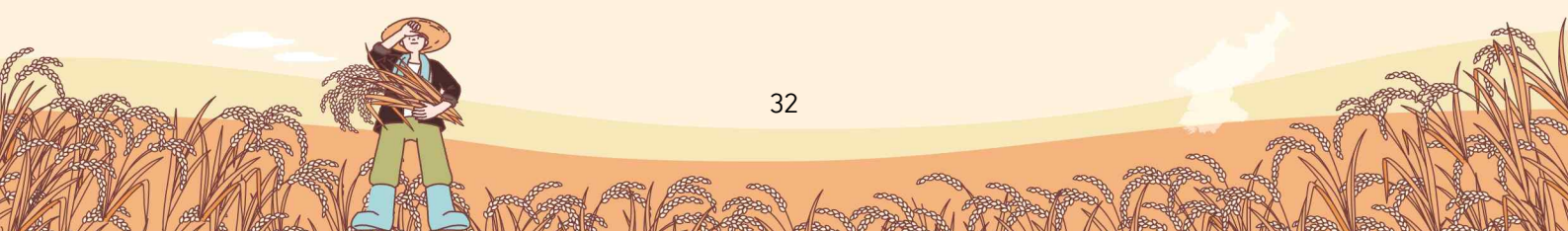
Shortly after liberation, various political parties, such as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the Korean Democratic Party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y, were competing for power in North Korea. As I explained earlier, after liberation all parties agreed to carry out land reform to abolish the landlord system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ideology but they disagreed about how it should be.

The Communist Party argued that land should be confiscated from landlords and distributed to farmers for free. But nationalist groups such as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nsisted that land should be purchased from landlords defending their interests.

In North Korea the Communist Party was the first to suggest a land reform proposal. In October 1945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adopted "the Communist Party's Resolution on Land Issue," which read as follows:

"The bourgeois-democratic revolution will be perfectly successful by nationalizing land and distributing it to farmers in proportion to their efforts and the number of their family members."

It means that in the bourgeois-democratic revolution, the transition to communism, all land should be owned by the state and cultivation rights be distributed to farmers. The resolution states that land subject to confiscation is from Japanese imperialists, traitors, usurers, temples, Confucian schools, local clans, and all private land except those cultivated by owners.



Then, confiscated land is owned by the state and managed by the Committee of Farmers or the Committee of People and distributed to farmers for cultivation. As mentioned earlier, land will be distributed proportionately to farmers' labor and family numbers, which means land is distributed based on the farm family's capability for cultivation.

This land reform measure of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complies with the communist ideology in that all land is nationalized. However, it is also transitional as it still depends on small-size farms for farming management. According to the communist ideology, farm management should be done joint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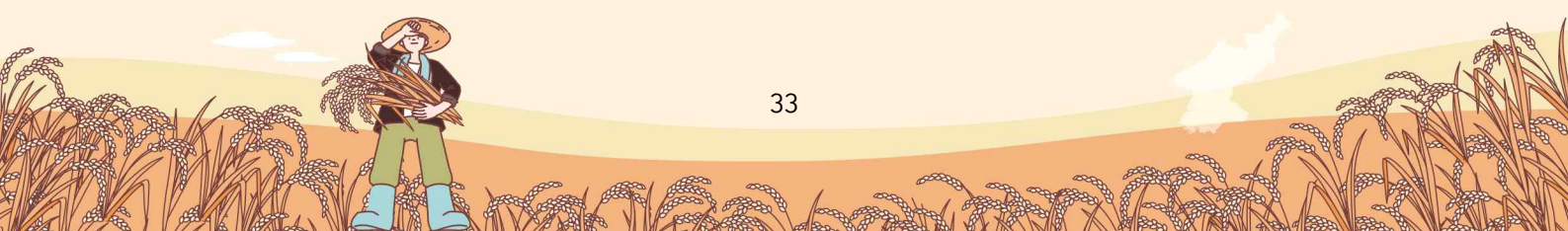
Therefore, it is a transitional measure considering the situation. but given that land should be nationalized, it was too extreme to get wide support of farmers.

The resolution states that land not cultivated by owners is subject to confiscation, but it was not easily agreed upon. After the release of the resolution, "The Convention of Members and Zealots of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in North Korean Five Provinces" was held in Pyongyang in Oct. 1945. There, the confiscation of landlord farmland was criticized and a proposal to confiscate only the land of Japanese and pro-Japanese collaborators was made.

In Oct. 1945, no consistent policy was made. The Korean Democratic Party, a nationalist and capitalist group, agreed on land distribution to farmers but could not suggest specific measures. Meanwhile,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rgued for confiscation of land by purchasing.

The following month in Nov. 1945, the situation changed rapidly at home and abroad. On Oct. 20, 1945, the trusteeship rule of the peninsula by the US, the Soviet Union, China and Britain was declared. Movements took place nationwide in protest against the four powers' rule.

The Soviet Union ruled the North with an ambition of securing the best interests in East Asia by exerting influence on the peninsula, but its plan was in trouble.





For example, at the meeting of three countries' foreign ministers held in London in Sep. to Oct. 1945, the Soviet Union argued a four-country guardianship rule on the peninsula. Specifically, it should militarily control Busan, Jeju Island, Jemulpo and Incheon in a document called "Suggestion for Joseon." This was to gain sea command to prevent Japan from entering inland.

Another incident was "the anti-Communist rally in Sinuiju" in Nov. 1945. It was a mass demonstration by 5,000 students from six middle schools in Sinuiju, North Pyeongan province. Due to the military response from the Communist Party and the Soviet Union, more than 20 people died, and 1,000 were arres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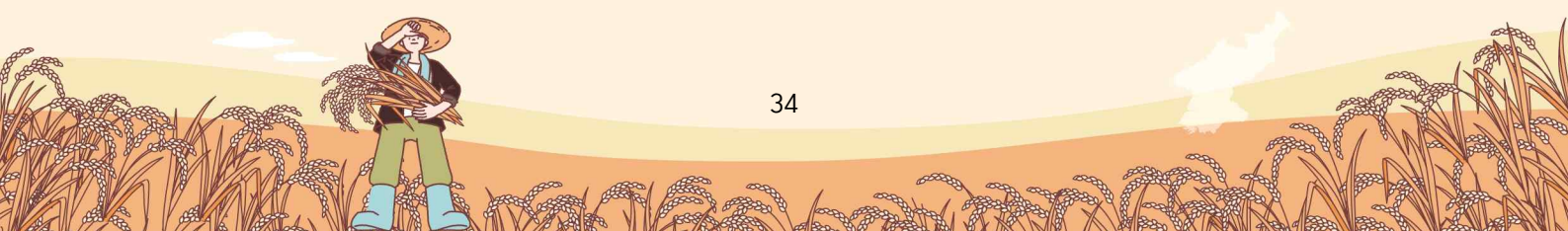
Some arrested students are said to have been sent to Siberia by the Soviet Union. The Communist Party of Korea's North Korean branch thought the Social Democratic Party was behind the rally and made a policy of weakening landlords who led the party.

In such a changed situation, to secure the best interest of the peninsula, the Soviet Union established a provisional government in the North. Through the government, it carried out land reform to abolish the landlord system, thereby weakening political opponents and getting the support of farmers.

Based on this, the Soviet Union planned to establish a unified government through negotiation with the US, and even if it failed, secure national interests by having influence at least on the North.

General-Major Comrade Romanenko submitted a report in Nov. 1945 to the military commander of Yunhaju of Russia based on the Oct land reform measure released by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Romanenko divided Korean landlords into three categories: small with 10 to 20 jeongbo of land; medium with 20 to 40 jeongbo of land; large with more than 40 jeongbo of land. He then suggested land from Japanese and large landlords be confiscated. He also proposed that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confiscated land be distributed to farmers with no or little land or hired farmers called "meoseum" and that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manage it.



Meanwhile, Romanenko suggested the need to specify the land reform measure based on thorough on-site inspection by agricultural experts. He also suggested that a committee be formed led by a responsible member of the party and consisting of Korean agricultural experts, North Korean representatives of each province and 20 to 25 Soviet farming experts to carefully study the land use of Joseon, which will then be used as basic data for carrying out land reform. Romanenko argued that the land reform process be completed by the end of March 1946, when sowing be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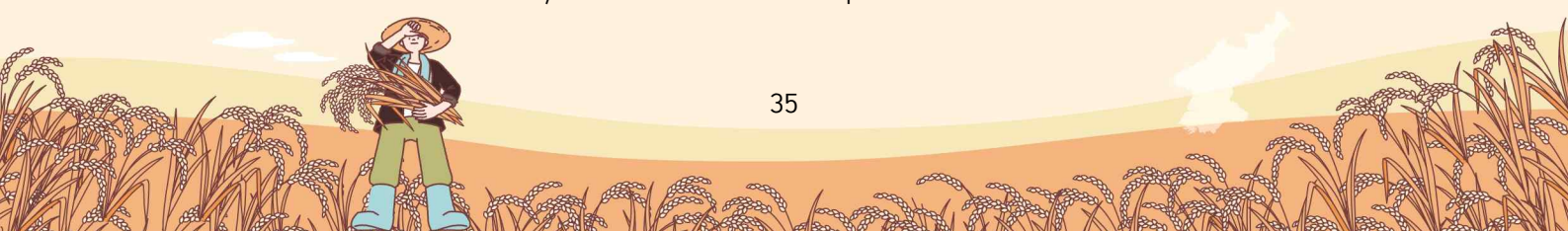
According to his proposal, in Dec. 1945, the committee of agricultural experts conducted a survey of farm households of North Korea. They extracted samples from 20 farms in North Pyeongan province, and the result showed that land owners of more than five jeongbo of land rent out more than half of their land, and those with three to five jeongbo of land, 41%.

To sum up, the more amount land owner had, the more they rented their land to tenants. Five jeongbo could be a division point between landlord and tenants. But it is just an average number, and in reality, often regardless of the size of land. For example, there were rich yeomen with more than five jeongbo and landlords with less than that.

Therefore, it was found that Romanenko's proposal that large landowners be defined as having more than 40 jeongbo of land and their land be confiscated did not correspond to reality. Such a survey of farms extended nationwide until Feb. 1946.

In Feb. 1946, the People's Temporary Committee of North Korea was launched to serve as a provisional government, as planned by the Soviet Union. Accepting the result of discussion on land reform measures, the Committee declared land reform measures through its resolution's Article 2(2) as follows: "Land and forest should be confiscated from Japanese aggressors and pro-Japanese collaborators as soon as possible; land and forest from Korean large landlords be nationalized in a proper way. Tenant farming where yields are divided evenly between the landlord and tenant should be abolished. Then land should be distributed to farmers for free, thereby establishing the basis of land reform.

This reveals three principles of nationalizing land, abolishing tenant farming and free distribution to farmers. Afterward, land reform petitions campaign such as farmer conferences held across North Korea took place. Meanwhile, the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and the Soviet military administration made specific land reform measures.



However, there was disagreement on specific measures.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and the Soviet military administration insisted on the existing measure based on the survey result, where more than five jeongbo of land and their landowners are subject to confiscation and confiscated land be nationalized and distributed to farmers for free.

Meanwhile the Foreign Ministry of the Soviet Union argued that more than ten jeongbo of owned land should be confiscated with less than that of land partially confiscated; the ownership of such land should be transferred to farmers, and in return, the landowner are paid on long-term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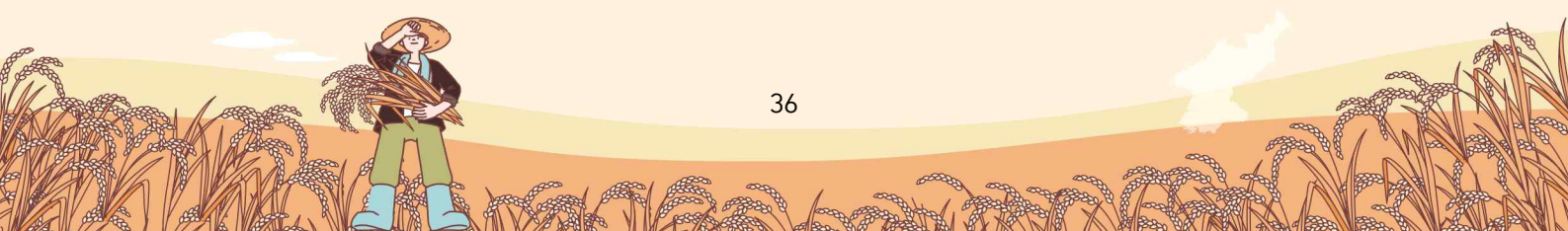
In late Feb. 1946, North Korean Farmers' Conference was held in Pyongyang, and there second revision to the initial measure of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was made. As a result, land ownership shifted to farmers according to the demand of the Soviet Union.

The revised measure went to the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held on March 5, 1946, for pro-con debate, and some members objected to it in the first round of discussion. They argued that confiscating land for free is so radical that land reform could be seen as a socialist revolution and that land from small and medium landowners be purchased to avoid the risk.

But some answered that the purpose of land reform is not to infringe on the capitalist order but to eliminate the feudalistic system. Eventually, the temporary committee members unanimously voted for the measure, and it was adopted as a law and officially declared as a land reform law the next day, on March 6, 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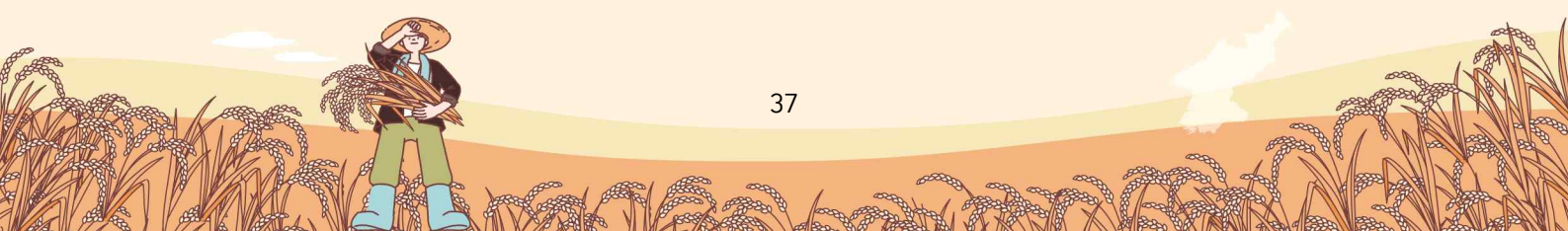
Through this process, land reform was launched in North Korea where more than five jeongbo of owned land and those not cultivated by landowners were confiscated without compensation and distributed it to farmers for free; when distributing land ownership and cultivation rights should be transferred to farmers.

So far we have examined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land reform law of North Korea. In March 6, 1946, land reform law was officially declared. Then, land reform was carried out, and more than five jeongbo of owned land and land not cultivated by owners were confiscated without compensation, and that was distributed to farmers for free.



Comparing to South Korea, where it took a long time to compromise on how to carry out land reform among various political groups and reform was not carried out until 1949, North Korea's reform was done very early.

It was possible since, amid movements against trustee rule and the anti-communist sentiment, the Soviet Union intended to get the support of people by establishing a provisional government and conducting land reform. Next time, we will look into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land reform



1-3 Land Reform of North Korea: Process of Implementation

Hello everyone. Last time we examined the enforcement process of the land reform law of North Korea. Today we will look into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land reform and the 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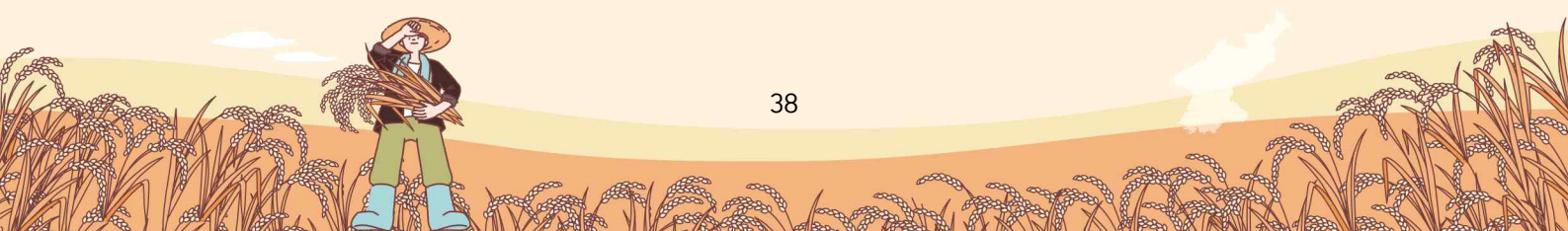
In North Korea, with the enforcement of land reform law in March 1946, land reform was carried out nationwide. The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completed confiscating to distributing land in about one month.

For a starter, let us look into the size of land confiscated in the process of land reform. A total of 1.008 million jeongbo of land were confiscated, or 55.4% of 1.82 million jeongbo of land on cultivation in North Korea.

By land types of paddy fields and dry fields, 289,000 jeongbo or 72.1% of the entire paddy field, and 691,500 jeongbo of dry land or 51.6% of the total were confiscated. Last time we found that in 1942, 64.3% of the tenant land was paddy field and 49.6% was dry field in North Korea. Therefore, the percentage of confiscated land is higher than that of tenant land, showing that land reform in North Korea was carried out very strictly.

Of 1.008 million confiscated land, 110,000 jeongbo or 11.6%, were owned by Japanese. 230,000 jeongbo, or 23.7%, were owned by landlords with more than 5 jeogbo. The number of large landlords in North Korea was smaller than that of South Korea. Therefore, more than their confiscated land are needed to distribute to farmers.

Confiscated land was from landlords who owned less than five jeongbo of the land but rent out some of their lands to tenant farmers, and such a tenant contract was maintained continuously. In other words, much of confiscated land was from those not cultivated by owners.



In confiscating land there was resistance from some landlords. In Pyongyang, a hand grenade was thrown into the building of the Communist Party Committee. In South Pyongan province, an arson attack occurred on a two-story building next to the Garrison Headquarters of Gangseo county. In Gangdong county, landlords gathered and conspired to detain the chief of local police office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land reform project. In Hwanghae province, 200 middle school students in Haeju boycotted class in opposition to the land re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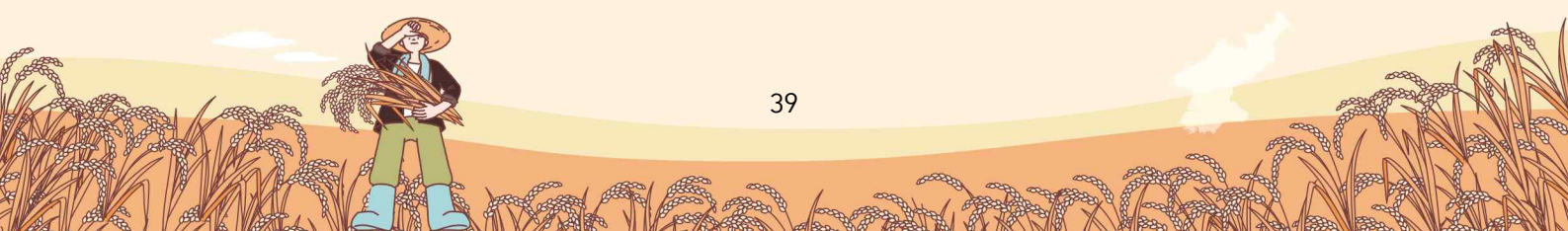
In contrast, there was a case where landowners distributed to their land to farmers before the land reform and were recognized as "patriotic landlord." When confiscating agricultural implements from landlords with more than five jeongbo of land, the so-called patriotic landlords were excluded.

In general it is known that resistance to land reform from landlords was not great.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First, the factor of divided North and South was at work. Landlords opposing land reform had an alternative of moving to the South rather than resisting to the Soviet Union forces stationed in the North.

Second, at the time of land reform landlords were not strong enough to resist to the reform collectively. After liberation, landlords were brought to the people's court by their village people as a traitor to the nation in some villages; the local People's Committee confiscated the property of pro-Japanese landlords. During the movements against trusteeship rule and anti-Communist movements like student rallies in Sinuiju, many of landlords in support of them were suppressed.

Third, during the land reform process, farmers were organized enough to confront landlords. In each rural area, the Rural Commission conducted land reform consisting of poor farmers, tenants, and farming workers. As many as 11,930 Rural Commissions were organized with nearly 200,000 farmers across North Korea participating in. Besides, youth self-defense forces were also created in rural areas.

As such, farmers were organized in the process of land reform,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landlords could not resist easily. Consequently,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land reform, the center of power shifted from landlords whose land was confiscated, nationalists and capitalists to farmers and socialists groups.



When distributing land to farmers, the labor of each farming household was evaluated by scor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putting those cultivating land first.

Detailed rules of the land reform law contained a score sheet. According to it, men aged from 18 to 60 and women from 18 to 50, considered the most active labor group, were given a score of one; men and women aged from 15 to 17 were given 0.7; those in other age groups were given 0.4, 0.3, or 0.1 depending on their respective availability for work.

As a result of land distribution, an average of 1.35 jeongbo of land were distributed to 724,500 households. There were great discrepancies in the average area of owned land among provinces due to the land reform. Hamgyeong and Hwanghae provinces owned an average of 1.8 jeongbo respectively, the largest of all provinces. Meanwhile, Gangwon province recorded the least with 1.23 jeongbo of 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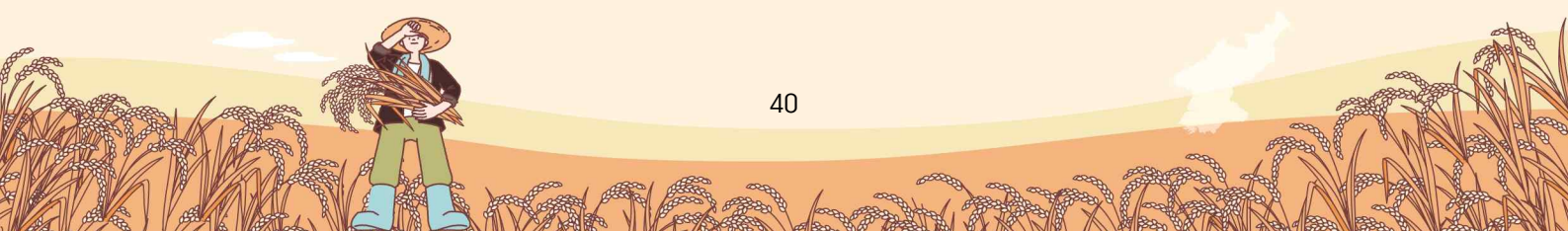
The reason is that land distribution was conducted in the administration unit of ri (township). In a province with more households than others, the average area of land distributed was small.

In a densely populated village, the size of distributed land was small. This created differences in land ownership in North Korea as a whole, along with the fact that as I mentioned earlier, land was distributed according to labor scores.

Therefore, after the land reform was conducted, farming households with more than 3.5 jeongbo of land accounted for 6.3% of the entire farming households while those with less than 0.5 jeongbo took up 10.7%, which shows the two extremes still existed.

But it can be found that after land reform in both Korea, there were great differences in regions. In North Korea, even though the imbalance in land ownership was not resolved completely, most farming households were distributed more than one jeongbo of land. Meanwhile, in South Korea, farming households with less than 0.5 jeongbo comprised 42.7% and those with 0.5 to 1 jeongbo 35.8%.

Due to this, it is often considered that land reform in North Korea was conducted more rigorously than in South Korea. But the North had larger farmland than the South but the population was much smaller. As a result, after land reform the middle class of North Korean farmers increased.



We cannot judge the economic status of each farming household simply by land ownership. If a household has large farmland and a large family to support, their lives could be harder than those with small land and family members.

Considering thi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alyzed farming households into three: those suffering food shortage as poor households; those who can sustain in a year of good harvest but suffer food shortage in a year of bad harvest as medium household; those with surplus food to be sold or loan regardless of the status of harvest as rich households.

Related available statistics was conducted in the late 1950s when agricultural cooperation was completed. According to this, 62% of the entire farming households were categorized as medium, suggesting that land reform contributed to equalizing the economic level of farm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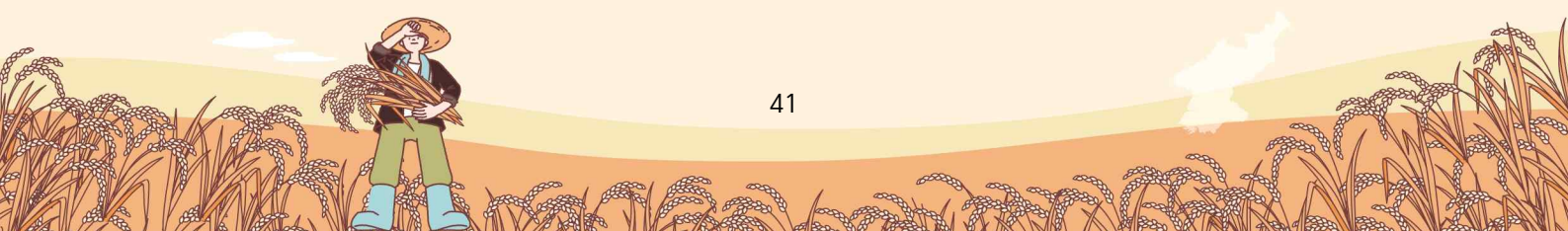
But this number was produced after the land of each farming household was invested for joint management as part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movement. Thus, the size of land owned did not affect each farming household's livelihood.

Lastly, according to related law, land reform in North Korea was based on free distribution, but as farmers must pay taxes in kind, it could be paid distribution.

Also, to get the support of farmers,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withdrew their position of nationalizing confiscated land and pursued reform to transfer land ownership to farmers. But the ownership transfer was just nominal.

According to the document titled "About land administration," adopted in Jan. 1950 by the decision of the Cabinet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land owned before reform was allowed to be bought, sold or handed over but land given by the reform was not allowed to be bought, sold, handed over or mortgaged.

When the owner died, the distributed land could be inherited to the deceased's family members, but when none farm, the land must be returned to the People's Commission. The returned land could be farmed by other farmers who had little land but they were just given rights to cultivate, not ownership rights.



In short, when the land reform law was enacted in 1946, land ownership went to farmers. Still, with their exercising ownership rights limited later, the law made land ownership increasingly belong to the state. This starkly contrasts to with South Korea, where farmers distributed land could excise their ownership rights, freely selling, buying, transferring or mortgaging land.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 pursued an agriculture cooperation movement nationwide. As a result of land reform, farmers who had exercised ownership rights on their land restrictively were denied their rights.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movement was a significant event in understanding North Korean agriculture as the result of the movement serves as a North Korean land ownership system that regulates the country's agriculture now. Next time, we will explore the North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movement and its results.

1-4 North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Movement

Hello, everyone. Today we will look into the North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movement, which took place in the 1950s. Earlier, we examined the North's land reform. To get the support of farmers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a pro-Soviet regime, North Korea withdrew its position of land nationalization and granted farmers land ownership r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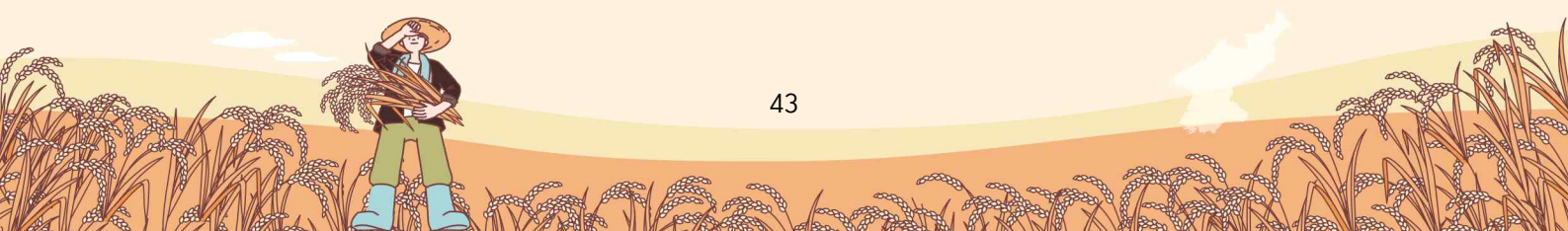
In light of Communist ideology it was a kind of compromise. But later North Korea imposed restrictions on ownership rights with change in the related institution, which was a step closer to the ultimate goal of land owned by all people.

In this context, it can be said that the North Korean agriculture cooperation movement is a step forward in the socialist modific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When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movement was completed, farmers' private land ownership completely disappeared, contributing to today's North Korean land ownership system. Today, let us look into the details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In North Korea, unlike the Soviet Union, where collective farms were established through agricultural cooperation, the tradition of rural community was weak, and farmers were traditionally independent as private land owners. Thus it was difficult to integrate management and even ownership of land.

But as the Korean War broke out after land reform, agricultural production needed to increase and thus joint labor was encourag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uch as the operation of production teams consisting of small farmers, cow-sharing and labor sharing. This was a contributing factor to agricultural coopera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oor farmers rose due to the Korean War and they strongly demanded agricultural cooperation. Social tension raised by the war also served as a favorable factor.

Meanwhile, land reform was already completed, and although there was still an imbalance in land ownership among farmers, the influence of rich farmers could have been better. After the reform, the majority farmers were of similar statu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tudied cases of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starting in 1949 to take measures for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As a result, they created a different one from what they referred to. North Korean model was called "People's Democratic Model." Let us look into the details of the North Korean cooperative model.

The Ultimate goal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was to establish an agricultural cooperative that organizes the management and ownership of farmers in every rural community. Such a cooperative is considered a transitional step to the nationalization of production means, the ultimate goal of Commu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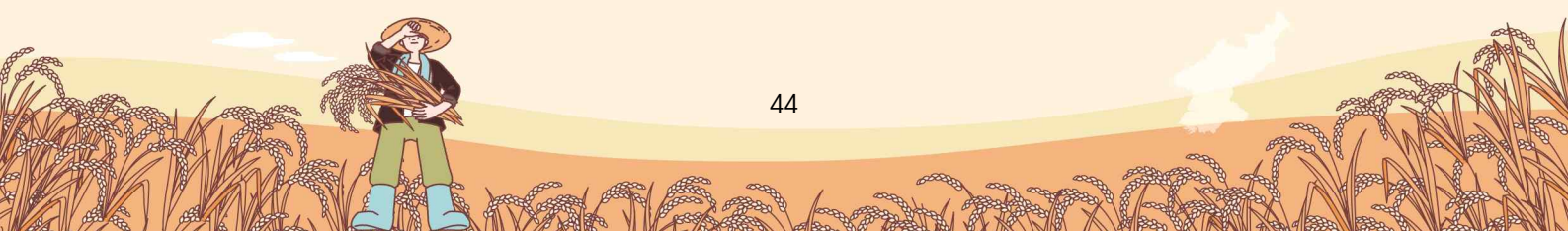
Lenin's last thesis, "About a Cooperative," stressed that the cooperative as the transitional step is very important to complete the socialist modific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To establish the transitional step of agricultural cooperativ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uggested three steps. They are types one, two and three of agricultural cooperation.

Type one of agricultural cooperation was the agricultural effort and cooperation team. The transitional team of labor sharing and cow sharing was generally a mutual aid temporary organization for joint labor consisting of a flexible number of 3 to 5 households. Meanwhile, the Agricultural effort and cooperation team was a permanent mutual aid organization with a fixed number of ten households.

Members shared draft animals such as plowing cows and agricultural equipment and did farming together from plowing, sowing, planting, weeding, harvesting and threshing. While belonging to the agricultural effort and cooperation team, they could also do farm on their own land, a noticeabl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cooperative.

They jointly work when it needs to. They have their land, and harvest from it belongs to them. The ownership of draft animals and agricultural equipment all belong to individual farmers and when necessary, they were shared and it was paid by labor or in products by custom.

Type one was a preparatory step to establishing an agricultural cooperative with small farmers as a basic unit, where draft animals or equipment that individual farmers cannot get are shared and joint work necessary for each season was organized well.



Type two is where farmers jointly invest in land and equipment and integrate them as cooperative assets and also do farming together. Farmers can get share of harvest in proportion to their invested land. They also get their share based on the number of their working days. Therefore, members of the cooperative get returns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their invested land and working days.

Meanwhile, in type three, the most elaborated form of cooperative management, distribution was made only based on the working day of farmers. In this case, the size of invested land does not affect the final distribution and thus land ownership of individual farmers means nothing to them.

The differences between types two and three changed farmers' preferences. It can be assumed that rich farmers with relatively much land preferred type two while poor farmers with little land favored type th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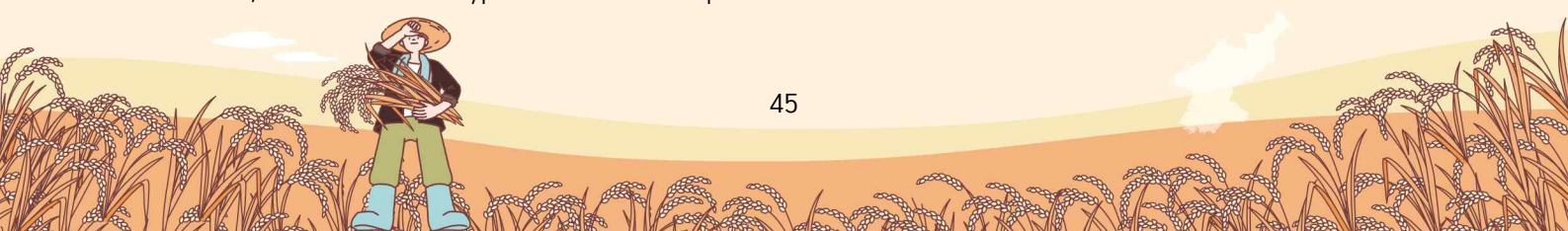
Land reform was carried out in North Korea, but there were discrepancies in land ownership among farmers as some land was not confiscated after considering the number of working members of farm households or cultivated by hired labor. Therefore, when establishing cooperatives, there wa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farmers.

Consequently, however, in the 1950s when agricultural cooperation was completed, the type three agricultural cooperative was established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began in 1954. As mentioned before,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was that which type of cooperative would be established is a matter to be decided by local farmers and their local conditions.

The director of the agriculture department of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said that the most preferred by farmers was type two, and he expressed his opinion that it is most suitable given their situations. He criticized that some high-ranking party members insisted on type three, the most elaborated level of cooperation and emphasiz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a cooperative type should be farmers' need for resources.

However, after agricultural cooperation movement was launched, there was no case of type one established. For the first year of the movement, type two accounted for 46% and type three, 54% but later type three became predominant.



In Dec. 1955, two years after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movement started, type three accounted for 92% of all cooperatives. This trend continued and in the late 1958 when the movement was declared to be finished, over 13,000 type three cooperatives were established in all rural areas.

Unexpected for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ll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were type three and several factors contributed to t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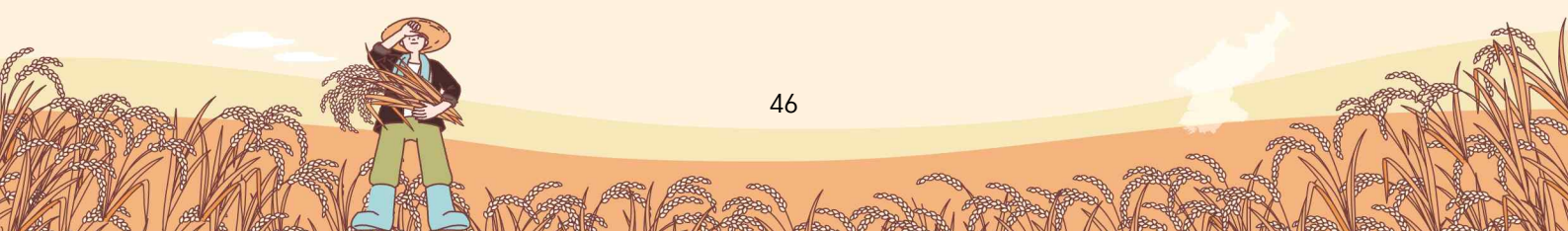
First, with the Korean War, a strong bond between the state and farmers was formed; farmers were eager to escape hardship and poverty after the war; different ideological beliefs of the North and South caused social tension. In addition, due to the land reform, most farmers had little difference in land ownership.

But rich farmers, though small in number, also existed, and despite their opposition, type three agricultural cooperative was built mainly thanks to the authorities' guidanc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tervened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farmers to lead them to type three, which was closest to the Communist ideal of agricultural cooperation.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pursued a policy for poor farmers, where it encouraged them to establish the type three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later made isolated rich farmers join the cooperatives in the organization process.

This process did not always go smoothly, however. Papers publish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reported resistance cases in several regions. Poor farmers and the member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ere aggressive in cooperative movement, while there was resistance from rich farmers, landlord-turned-farmers and members of the same clan of rural villages.

Some farmers joine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reluctantly under social pressure. For example, in late 1953 just before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movement began, there were massive slaughter and sale of draft animals.



In August 1953 an internal policy on agricultural cooperation was finalized in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it began to support establishing cooperatives in several areas on a trial basis. As this was known, farmers slaughtered their cows for meat and neglected to raise them.

They thought when an agricultural cooperative was established, their cows will belong to the asset of the cooperative and that it would be better to use them as meat. The cows and land were converted to a dry field to prevent them from being invested in the cooperative. The following phrase from a North Korean document well illustrates the situation of that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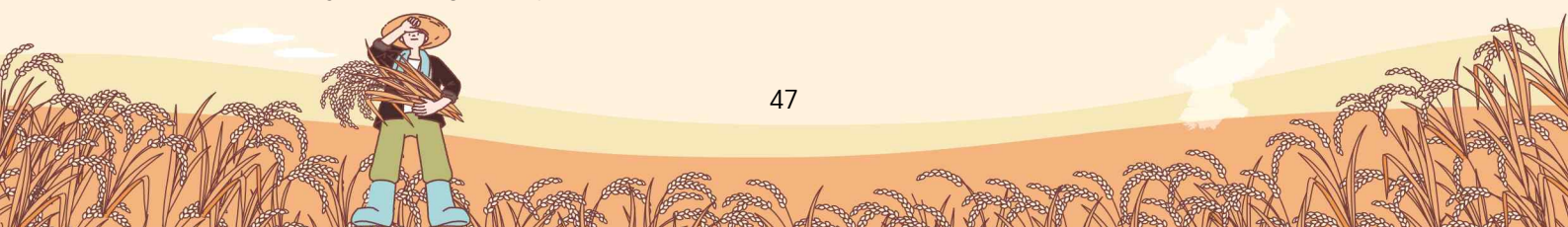
"Furthermore, some farmers when joining the cooperative, sought for double profits, hiding some their land and workers or sought to farm more land than the cooperative rule dictates. In some rare cases, some avoid contributing draft animals or sell large cows and bought small ones to contribute to the cooperative."

In a case, farmers withdrew from cooperatives on a massive scale. Known as "Baecheon Wind, farmers in Hwanghae province dropped out of their cooperatives on a large scale from the autumn of 1956 just after the revenue distribution of the cooperative to early in 1957. Baecheon of Hwanghae province was a major breadbasket in North Korea and landlord system based on rice farming prevailed.

Rich farmers including former landlords in the region had strong resistance to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policy. As members were exempted from agricultural tax in kind, they temporarily joined the cooperative and then withdrew it altogether.

It was possible because at the time anyone could withdraw from the cooperative and when they did, their land was returned according to the cooperative regulations. Due to this incident, the chairman of the Communist Party of South Hwanghae province was criticized and executed. In addition, cases of violent resistance were also reported. In South Hwanghae province, 97 cases of fire on cooperatives were reported for four months. Five cows were reported to have been poisoned to death.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ooperative, another obstacle was a strong sense of kinship present in rural community. When there were more than two powerful clans, they refused to join a single cooperative.



For example, seven cooperatives were established in a village of Bukcheong county of South Hamgyeong province. However,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m into one, village people rejected it, raising the following questions “Is there no problem in doing work when each descent group gathers together?” “Which village should a manager be from?” “How is the asset of each cooperative managed?”

Therefor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focused on reorganizing the traditional village order while pursuing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movement. After 1955 with intensive instruction by the Workers' Party of Korea, clan elders who executed influence on the local village and served as managers of cooperatives were replaced by new lea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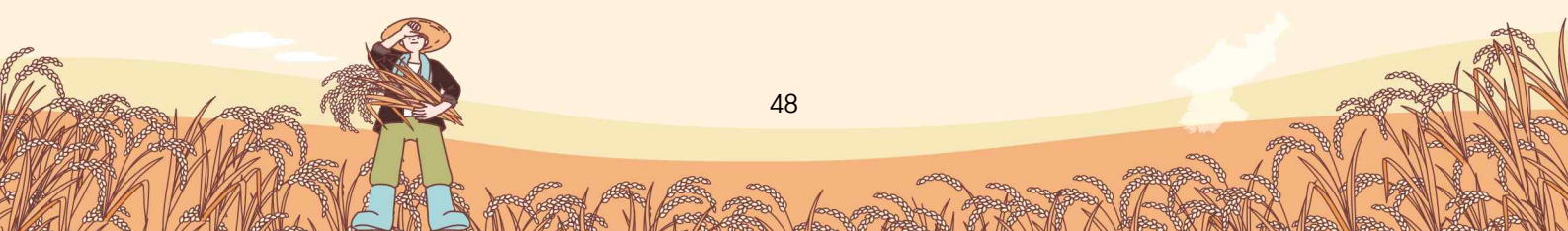
For this, a measure was conducted to discharge soldiers who rose in number after the Korean War from the army and return them home in rural areas to hire managers of cooperatives. It is said that at the time, the number of North Korean soldiers fell by 80,000. They served as a manager of cooperatives to help reorganize the traditional village order.

As such the North Korean cooperative movement was a revolution in production relation and also a social reform that fundamentally changed the order of the rural communities.

The order of traditional villages centered on local powers such as rich, middle-and high-class farmers, and clan elders shifted to socialist supporters, including poor farmers. Also, with women and youth working as managers of cooperatives, the patriarchal order based on men and elders collapsed and voice of women and youth was strengthened.

Despite such positive social change, however,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resulted in rigidity of the agricultural sector as a common management method of distributing yields based on annual working days regardless of land ownership became the basic principle of production.

For example, later farmers worked harder on their own dry field where they can get all harvest than on cooperatives jointly managed. Some even stole agricultural materials to put them on their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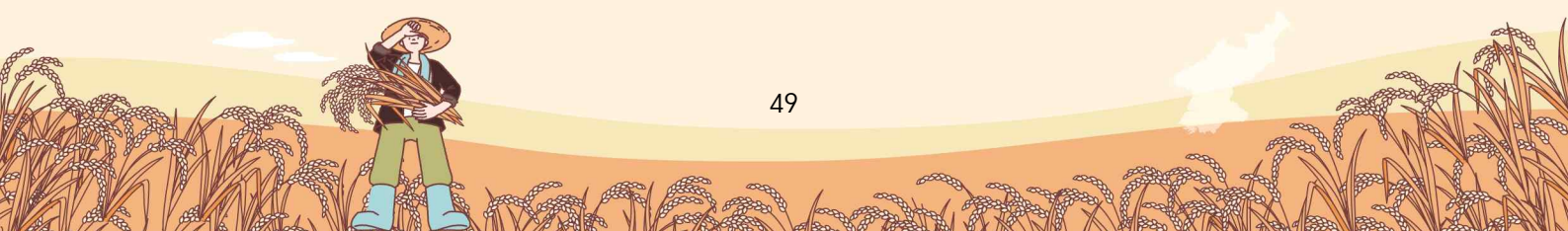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recognized this problem from cases in China. It conducted reform measures such as subdividing production units as “sub-work team” and “team responsible for farmland” so that each farmer was properly rewarded. About this, I will give more details next time.

This time we have looked into the process of conducting North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I will add some more points before wrapping up this lecture. Agricultural cooperatives as a result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movement was changed into cooperative farm in 1962 with the basic structure maintained today. Land contributed by farmers when joining a cooperative belonged to cooperative farms according to the North Korean law, not to the state.

State-owned farms where land of cooperatives was integrated and nationalized were established in some areas as part of land nationalization. but due to the economic crisis, such a move has stopped for three decades. Yet investig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shows that many North Koreans consider farmland to belong to the state.

It means that cooperative ownership means nothing and farming in North Korea is about achieving production goal set by the state. Therefore, agricultural cooperation is interpreted as the concept of cooperative ownership in a legal sense but in reality such concept has no substance.

With this, I wrap up the first lecture, “North Korean Agriculture.” In the second lecture, we will examine the status of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its system.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1周

朝鲜农业的初期条件:土地改革和农业合作化运动

1-1

解放后朝鲜的农业现状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朝鲜的农业》课程的金成南。朝鲜这个国家和韩国是同一民族，朝韩之间既是向往民族统一的关系，在现实中又把彼此视为主要敌人，也存在发生军事冲突的紧张关系。

每天晚上新闻的前半部分都会报道关于朝鲜的新闻，可见韩国人对朝鲜非常关心，但大部分关心都局限于政治、军事方面。

对于韩国的经济发展经验，朝鲜也给予了有意义的启示。在1950年因韩国战争导致分裂胶着化之前，（在朝鲜半岛上）形成了1000多年的单一民族国家；以1950年的韩国战争为契机，（朝鲜半岛）分成了资本主义和共产主义两个采用不同体制的国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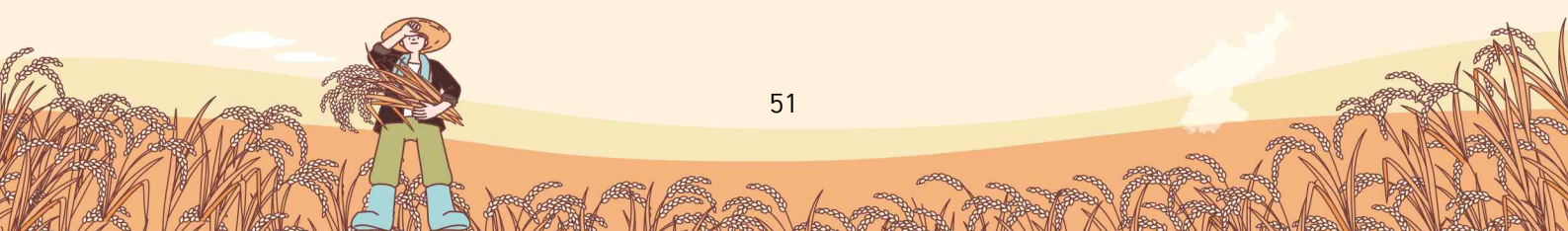
在除了制度之外其他条件都非常相似的国家采用不同的制度，会导致在经济成就上表现出怎样的差异？朝鲜和韩国为我们提供了一个很好的示例，这刺激了经济史研究者（对朝鲜和韩国经济进行研究）的兴趣。所以我认为，为了更好地理解韩国的经济发展经验，有必要同时了解朝鲜是如何沦落成今天这样最贫困落后国家的历史教训。

另外，本讲在朝鲜经济的各个方面中也将以朝鲜的农业为主题进行讨论。为什么是农业呢？

和当今时代一样，为了发展先进经济，制造业必须发达，而制造业发展的前提条件就是农业生产率的提高。这是因为随着农业生产率的提高，原本投入到农业中的劳动力和资本才能更多地投入到制造业领域。

韩国在1960~1970年的经济开发时期，为了培育重化学工业等制造业付出了大量的努力，但与此同时也在追求农业的增产。例如，20世纪70年代初开发出名为统一稻的新品种水稻，作为主食的大米因此才实现了自给自足。

其结果便是国家可以把更多力量集中于制造业当中，从而更有效地推进以制造业为中心的增长战略。因此，观察农业的发展经验非常重要，正是基于这个原因，本次讲座想要集中分析朝鲜经济中的农业领域。



讲座以朝鲜的农业为主题，具体由以下内容构成。在第一讲中，来了解一下已成为现代朝鲜农业系统基础的1940~1950年代朝鲜的土地改革及农业合作化运动。第二讲和第三讲将分别从制度层面和实际运营层面来分析朝鲜农业和畜牧业的现状。

为了更深入地了解朝鲜农业，第四讲将考察朝鲜的农业金融和农产品流通。第五讲主要探讨朝鲜今后的改革开放，以及为了促进朝鲜农业发展可能开展的韩朝间的农业合作；最后在第六中将通过中国等国家的事例来了解被认为是朝鲜农业发展的最终方案的农业部门体制转换问题。

这次讲座中会涉及很多历史或制度上的事件，在讨论详细主题的过程中，也会出现专业用语。为了准确理解讲座内容，请同学们充分利用介绍给大家的参考资料。

本讲作为《朝鲜的农业》的第一讲，以“朝鲜农业的初期条件:土地改革和农业合作化运动”为主题。

这节课我们来看一下作为朝鲜农业根基的基础制度的形成过程——从20世纪40年代的土地改革到20世纪50年代的农业合作化运动。

韩国也同样有土地改革，按照法令，韩国的土地改革被称之为“农地改革”。无论是土地改革还是农地改革，都是指废除了一直持续到殖民地时期的旧的地主制度，创设了今天这种以自耕农为中心的制度，可以说是奠定了今天的农业制度基础的契机。

地主制度，作为一种法律制度是指在这种制度下，即使不是直接耕种农地的农民，也可以拥有农地，并允许农地所有者（即地主）向实际耕作农地的农民租佃，即地主出租农地、收取地租；作为经济现象，则是指收取地租的地主们在农地所有关系中占据主导地位。

土地改革或农地改革的结果是，法律上禁止不实际耕种农地的地主拥有农地，从而形成了耕者有其田，即农地耕种者成为该农地所有者的现行制度。

在韩国，耕者有其田原则即使现在也还是宪法第121条第1项（“国家要努力实现耕者有其田原则，禁止农地的租佃制度”）中所明确规定的内容，原则上非耕种者不能拥有农地。近年来，社会上也曾因非法农地投机问题闹得沸沸扬扬，正是因为这个原因。

虽然如果不种地就不能拥有农地，但是如果预测到某块农地未来有被开发的可能性，可以将其转化为非农地，通过这种方式期待开发收益或土地征用补偿金。这种情况下，因对利益的觊觎，并非农户的外地人便会购买农地，并将该农地伪装成耕作的样子。耕者有其田的原则至今还在宪法上明确规定着，这是对过去的地主制度给社会经济造成了很大弊端的历史进行反省的结果。

从日本帝国主义的统治下解放出来后，韩国和朝鲜开始热烈讨论土地改革问题，朝鲜的农业也在讨论过程中形成了初期制度基础。这节课首先让我们了解一下殖民地以来朝鲜地区农地所有结构的历程，了解一下朝鲜土地改革的背景。

首先，通过殖民地时期不同农业经营形态下的农户构成比的变化，了解一下地主制的实际情况。从殖民地初期的1915年来看，全国自耕农只有21.7%，而完全不拥有农地的佃农占35.9%，虽然拥有自己的部分耕地，但耕地不足，需要从地主那里获得租佃的自耕农兼佃农占40.9%。

事实上，地主制并不是殖民地时期突然出现的，而是朝鲜后期以来一直进行的并作（土地所有者与佃户按比例分配耕作后产生收入的方式）惯例的延续。两班阶层或在农业经营上获得成功的阶层在扩大农地所有规模的同时，把无法自耕的农地交给农地相对不足的农民并作农耕，这样的惯例自朝鲜后期以来一直存在。因此，即使已经到了1915年，仍有相当一部分农民处于租佃耕种的状态，只有21.7%的自耕农。

经过殖民地时期，这种农田所有结构并未消除。相反，日本帝国主义将原有的地主阶层作为殖民地农业管理的伙伴，以地主为媒介，贯彻将殖民地朝鲜打造成日本帝国大米生产基地的农业管理政策。

20世纪20年代日本帝国主义的产米增殖计划就是这种农业管理的一部分。进入20世纪30年代以后，随着全球大萧条的发生，小农户的经济地位变得更加恶劣，日本的大米也变得过剩，这种农业管理基调也随着发生了一些变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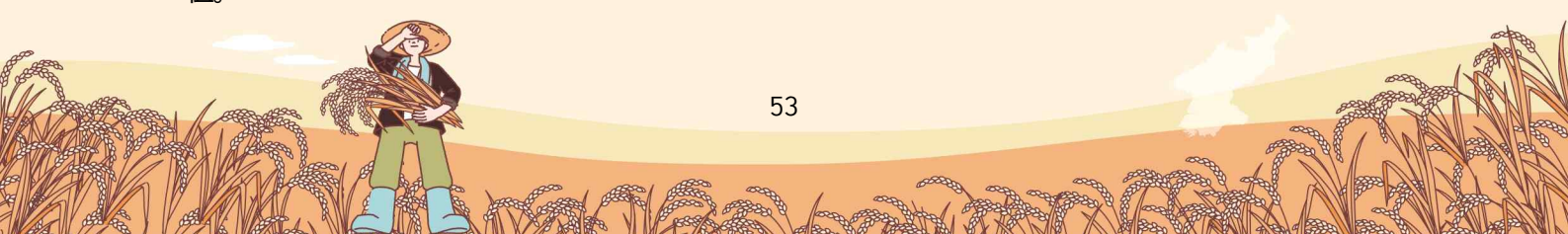
20世纪30年代日帝的推进的农地令的制定和自耕农地创设项目等就是这样的政策，但这并不能带来农地所有制度的全面整改。

因此，从解放前的1941年来看，全国自耕农的比例仍仅为17.8%。佃农则从1915年的35.9%增加到1941年的53.6%，比重超过了农民总数的一半。

从结果来看，地主制在不断强化的状态下得以存续，解决土地制度成为了解放后韩国人需要自行解决的最重大课题之一。地主制的这种动向也被解释为是殖民地时期人口增加的结果。

殖民地时期人口持续增加，日本帝国主义实施了以农业为中心的产业政策，其结果是能将增加的人口吸纳为雇佣者的制造业部门增长不足，增加的人口压力直接成为了农业部门的负担。

下面我们来看一下解放前各地区地主制的特点。首先比较一下1943年南北韩的租佃比率。如果将整个耕地分为水田和旱田的话，水田的租佃比率，韩国为69%，朝鲜为64.3%，两个地区显示出比较相似的数值。



作为参考，比起自家消费，当时的大米种植更多的是出于商业目的，因此，地主在扩大农地拥有规模方面，稻田比旱田更具吸引力。这种情况下，无论韩国还是朝鲜，稻田的佃地率都很高。

从旱田的情况来看，韩国旱田的租佃率为63.1%，朝鲜为49.6%。在韩国，旱田的租佃率也呈现出与水田相似的数值，而在朝鲜，因难以商业化，因此旱田的佃地率要低得多。这从朝鲜土地贫瘠、旱田生产率低的情况中也可以找到原因。

综上所述，朝鲜地区以稻田为中心发展了地主制，从表中可以看出，朝鲜地区耕地中稻田的面积并不比韩国大，所以整体上地主制的强度并不比韩国高。

这些事实从南北不同经营形式下农户构成的比较中也可以看出。从1942年的资料来看，韩国的自耕农只有13.8%，而朝鲜则为26.2%，所占比重更大。佃农的占比，韩国为57.6%，朝鲜为45.7%，朝鲜的佃农比重更少。也就是说，殖民地时期的地主制在以稻田为中心发展农业的韩国地区更为严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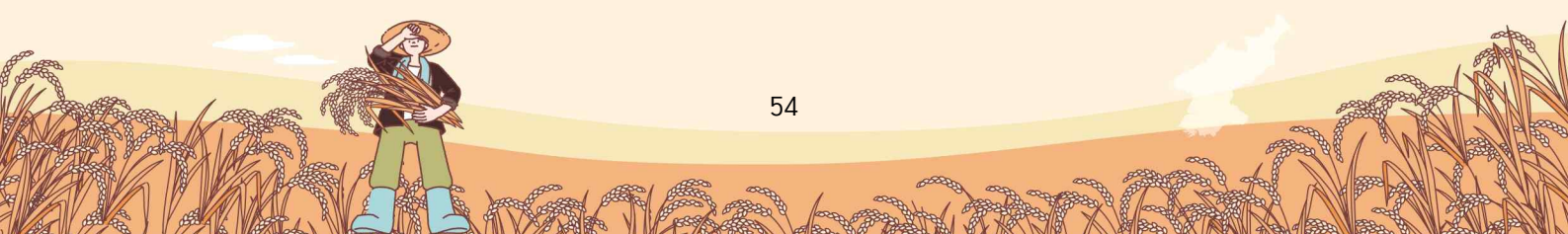
但从结果来看，朝鲜地区的土地改革比韩国进行的更早。解放后，韩国和朝鲜都围绕以何种方式消除地主制、建立耕者有其田原则下的农地所有制度展开了尖锐的争论。这不是单纯的制度应该怎么做的问题，而是带有资本主义还是社会主义等理念斗争形式进行的。

朝鲜在解放后由苏联军政实施了接管，采纳社会主义理念的政治势力在政府建立过程中起到了主导作用。同时，与韩国相比，朝鲜地主制的强度相对较弱，这也成为在公论场合难以贯彻地主的利害关系的背景。通过与韩国的比较，我们可以解读到这种背景的差异起到了一定作用。

当然，即使在朝鲜，各地区地主制的发展程度也存在差异。在以水田为中心、以大米种植为主轴的黄海道和平安南北道，地主制已经发展到了与韩国相似的程度。

从1942年朝鲜6个道中按经营形态分类的农户比率来看，黄海道的自耕农占15.4%，佃农占58.8%，与韩国的平均值——自耕农占13.8%，佃农占57.6%的结构相似。平安南北道的自耕农比率虽然高于韩国的平均水平，但佃农的比重超过了一半，同样可以说是地主制发达的地区。

相反，在本来就土地贫瘠，比起水田，以旱田耕作为主的位于朝鲜半岛东北部高山地带的咸镜南北道，佃农的比重相当低。咸镜南道佃农的比率为28.3%，咸镜北道只有18.4%。但是，众所周知，经过殖民统治时期后，咸镜南北道的地主制得到了飞速的发展。



对咸镜南道的研究表明，把1917年按经营形态分类的农户数看作100时，自耕农在1927年减少到90，1932年减少到71，而佃农在1927年增加到了106，1932年急剧增加到188。指数为188这一点，意味着同期佃农数量几乎增加了2倍左右。

因此，虽然与其他道相比，咸镜南道的地主制发展程度并不高，但农民层的急剧没落，使得咸镜南道最终成为了革命性农民组合运动活跃的地区。

以上就是作为朝鲜土地改革背景的解放前朝鲜的地主制动向。解放后，地主制经营的扩大现象是南北韩共同存在的全国性现象，在朝鲜，与旱田相比，以水田为中心的地主制更加发达，从地区来看，以黄海道、平安南北道等西部地区为中心，地主制强势存续。

在这样的背景下，统治朝鲜的苏联军政和社会主义势力加快了土地改革，在解放后的第二年，即1946年全面进行土地改革，在短期内革除了地主制。对此，我们将在下节课再进行考察。

1-2 朝鲜的土地改革：制定法令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了解了解放后朝鲜的农业状况。从这节课开始，我们将考察一下朝鲜地区土地改革的实施过程。

朝鲜的土地改革由1946年3月颁布法令开始，仅用1个月就完成了所有项目。作为参考，与韩国相比朝鲜起步早，时间也短得多。这是因当时的政治氛围、没收土地和对农民的分配方式不同等原因造成的。考虑到这一点，我们先来看一下土地改革法令的制定过程。

解放后，朝鲜共产党、朝鲜民主党、社会民主党等代表各界的政党在朝鲜地区展开了角逐。正如前面所说明的那样，解放后无论政治理念如何，认为有必要实施取消过去的地主制实施土地改革，这一点上大家都有同感，但在方式上有很多分歧。

共产党阵营主张从地主那里无偿没收土地，无偿分配给农民，但社会民主党等民族主义阵营主张反映地主阶层的利益，实施向地主支付一定补偿的有偿收购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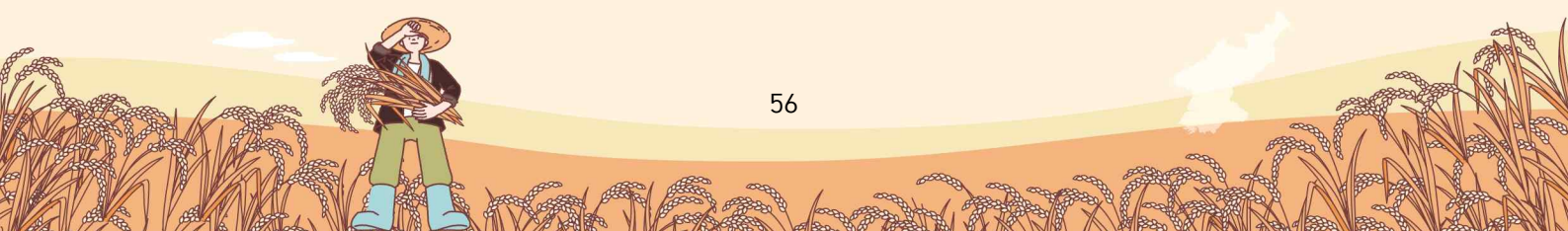
在朝鲜最先提出具体土地改革方案的是朝鲜共产党。1945年10月朝鲜共产党中央委员会通过的《共产党对土地问题的决议》，其全文如下。

"在资产阶级民主主义革命过程中，将全部土地国有化，将其与农民的努力和家庭人口成正比的方式重新分配，从而能完全解决"。

在去往共产主义的过渡阶段，即资产阶级民主主义革命阶段，将所有土地归国家所有，向农民分配耕作权，没收为国家所有的土地具体是什么，接下来将会阐述。该决议把日本帝国主义者、背叛民族者、高利贷者、寺院、乡校、宗门等共同体拥有的土地，以及自己耕种的土地以外的土地，全部列为没收对象。

没收的土地属于国家所有，由农民委员会或人民委员会进行管理，并把它们分配给农民耕种。此外，如前文所述，分配的土地数量要与农民的劳动力和家庭成员数量成正比，这是考虑到各农户的耕作能力来决定分配土地的多寡的内容。

虽然朝鲜共产党的土地改革方案在将所有土地国有化这一点上符合共产主义理念，但各土地的耕作单位都为农户，这仍然是依赖于过去的小农经营，因此可以说这是过渡性的方案。因为按照共产主义理念，农业经营也需要共同进行。



因此，虽然具有考虑了现实层面的过渡性措施的性质，但另一方面，从制定了土地国有化的方针这一点来看，朝鲜当时是想要得到农民的广泛支持，其极端性很强。

另外，决议中规定不直接耕种的土地都是被没收的对象，但这也是当时不容易达成协议的问题。决议发表后，1945年10月，在朝鲜共产党于平壤召开的“朝鲜共产党朝鲜5道党员及积极分子大会”上，批判了没收地主土地的方针，制定了仅限于对日本帝国主义和亲日派地主的土地进行没收的方针。

1945年10月，当时朝鲜共产党内部也没有制定出统一的方针；可以说是民族主义、资本主义势力政党的朝鲜民主党原则上赞成对农民的土地分配，但并没有提出具体的方案；社会民主党则主张有偿收购方案。

在这种情况下，到了第二个月，即1945年11月，国内外局势发生了急剧变化。1945年10月20日，美国、苏联、中国、英国公布了对朝鲜半岛的委托统治方案，反对强国委托统治的运动在全国范围内广泛开展。

当时在朝鲜实行军政的苏联想发挥对朝鲜半岛的影响力，怀有确保其在东亚地区最大的国家利益的野心，但这种构想出现了差池。

例如，在1945年9月至10月举行的伦敦三国外相会议上，苏联通过题为《关于朝鲜的提案》的文件，主张对朝鲜半岛进行委托统治，即对韩半岛进行四国共同监护，同时具体要求应由苏联军事管制釜山、济州岛、仁川、利物浦地区。通过这一措施，苏联试图确保能够阻止日本进出大陆的制海权。

另一个契机是1945年11月发生的“新义州反共学生事件”。这是由平安北道新义州的6所中学、5000多名学生高喊着打倒共产党的大规模示威活动，朝鲜共产党和苏联军队的武力应对，导致20多人死亡、1000多人被捕。

据悉，部分被捕学生被送往了苏联西伯利亚地区。朝鲜共产党朝鲜分局认为，该事件的背后有社会民主党，因此制定了削弱构成社会民主党主力的地主势力的方针。

在这种局势变化中，苏联为了确保在朝鲜半岛最大的国家利益，首先在实际支配的朝鲜地区建立了临时政府，通过临时政府进行土地改革，打破地主制度，削弱反对政治势力的地位，同时得到普通农民的支持。

以此为基础，计划通过与美国协商谋求今后建立统一政府，即使统一政府成立失败，至少也要确保对朝鲜地区的影响力，守护自己的国家利益。

1945年11月末，担任苏联军民政官的罗马年科以朝鲜共产党10月发表的土地改革方案为基础，向上级沿海州军管区提交了以没收大地主土地为主要内容的土地改革方案。

罗马年科提议，将韩国地主阶层分为拥有10~20町步（韩国土地面积单位，1町步约等于1公顷）的小地主、拥有20~40町步的中地主、拥有40町步以上的大地主，并提议没收日本地主的土地和拥有40町步以上大地主所有的土地。另外，像朝鲜共产党原有的方案一样，把没收的土地分配给没有土地或土地较少的农民和被称为长工的雇佣农，并提出由人民委员会进行管理。

另一方面，罗马年科提出有必要在农业专家深入实地调查的基础上细化土地改革方案。由以有责任心的党内人员为首长，率领包括朝鲜人农业专家、朝鲜各道代表、苏联农业专家组成的20~25名规模的委员会，让委员会仔细研究朝鲜的土地使用问题，准备执行土地改革的基础资料。罗马年科主张，所有土地改革相关程序必须在下一年，即1946年3月底播种开始之前完成。

因此，1945年12月，由农业专家组成的委员会对朝鲜地区的农户情况展开了调查。在平安北道对20个村庄进行抽样调查的结果显示，5町步以上的土地所有者把一半以上的土地租给了佃农，3至5町步的土地所有者把约41%的土地租给了佃农。

总结一下调查结果，大体上与土地所有规模成比例，规模越大租给佃农的比例越增加，衡量地主和普通农民的分界点可以设定为5町步，只是这样的标准只是平均情况，实际上与土地所有面积无关，5町步以上所有者中也存在自耕农或富农，即使只拥有不足5町步土地的农户，也存在将土地租给佃农的地主群体。

因此，调查发现当初罗马年科将朝鲜地区大地主标准定为40町步以上的所有者，只没收他们土地的方式与现实不符。这样的农户情况调查至1946年2月，扩大到了全国范围。

1946年2月，按照苏联的构想，在朝鲜成立了临时政府——朝鲜临时人民委员会。接着此前土地改革方案的讨论结果，新成立的朝鲜临时人民委员会通过决定书第2条第2项阐明了如下土地改革方针。"在最短时间内整理从日本侵略者和亲日反动分子手中没收的土地和森林，以适当的方法将朝鲜人大地主（的土地）和森林国有化，废除半分佃制，无偿分配给农民，为土地改革奠定基础而努力。"

这阐明了将大地主土地国有化、废除租佃制度、无偿分配土地给农民的三大原则。此后，朝鲜各地举行农民大会等，各地农民就土地改革展开了土地改革请愿运动，同时临时人民委员会和苏联军政当局也开始制定具体的土地改革方案。

但是在这个阶段，对于具体的方案还存在分歧，朝鲜共产党和苏联军政以农户情况调查结果为基础，主张将拥有5町步以上土地的地主和租凭给佃户的土地确定为没收对象，同时主张将没收的土地国有化，无偿赋予农民耕作权。

相反，苏联本国的外务人民委员部则主张没收拥有10町步以上土地的地主的全部土地，但10町步以下只没收部分土地，将没收的土地的所有权完全转移给农民，但农民要长期按年偿还所有权转移补偿，即采取有偿分配方式。

其中，1946年2月末在平壤召开了朝鲜农民代表大会，对当初朝鲜共产党的土地改革案进行了第二次修改，结果是接受了苏联本国的部分要求，将土地所有权的归属主体变更为农民。

这些修正案被提交到1946年3月5日召开的朝鲜临时人民委员会，经过了赞成和反对的讨论，部分委员在第一次讨论中提出了反对意见。有人主张，无偿没收地主所有土地的方案过于激进，土地改革稍有不慎就会被认为是社会主义革命，为了防止这种担忧，应该有偿购买中小地主的土地。

但是土地改革并不是侵害资本主义秩序，而是以根除封建体制为目的的回答，最终得到临时委员会委员的一致赞同，法令被采纳，第二天，即1946年3月6日正式颁布了土地改革法令。

通过上述过程，朝鲜地区开始了对5町步以上的地主所有地和不直接耕种土地的无偿没收、无偿分配，只是，这种分配是以完全转移所有权而非仅限耕作权的方式开始实施了。

到目前为止，我们了解了朝鲜土地改革法令的制定过程。1946年3月6日，土地改革法令正式颁布，朝鲜全面推行土地改革，对5町步以上地主所有土地和非直接耕种的土地实行无偿没收和无偿分配。

作为参考，韩国围绕土地改革方式，各种政治势力之间的协议过程非常艰难，直到1949年才看到改革的实施，从这一点来看朝鲜在相当早的时期就实施了土地改革。而这背后的原因便是，在当时反对委托统治运动和反共运动的氛围中，苏联当局在朝鲜地区首先建立了临时政权，之后又想通过土地改革获得民心。下节课我们接着来看一下土地改革的实施过程。

1-3 朝鲜的土地改革：实施过程

同学们，大家好。上节课，我们了解了朝鲜土地改革法令的制定过程。本节课我们来看一下土地改革的实施过程及其结果。

1946年3月，随着土地改革法令的实施，朝鲜全面实施了土地改革。朝鲜临时人民委员会在不到一个多月的时间里就完成了土地没收和分配等土地改革的全部过程。

首先来看一下在土地改革过程中被没收的土地规模如何。朝鲜全境没收的土地总面积为100万8000多町步，相当于朝鲜全境农业用土地面积182万町步中55.4%的土地被没收。

按水田和旱田划分，对没收土地和总面积进行比较，水田没收28.9万多町步，占水田总面积的72.1%，旱田没收69.15万町步，占总面积的51.6%。上一节课说过，1942年朝鲜地区的佃地面积比重为水田64.3%，旱田49.6%，没收的土地面积比重超过了这一比例，可见朝鲜的土地改革非常严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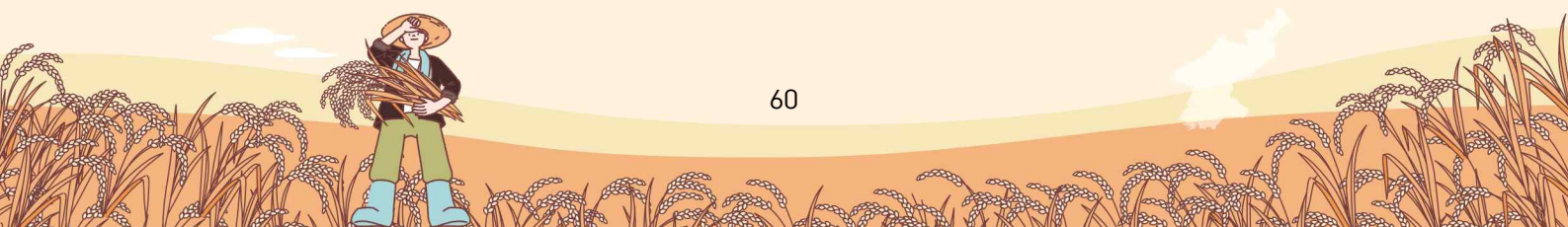
在被没收的100万8000多町步土地中，当初日本人拥有的土地只有11万町步左右，占11.6%，5町步以上地主的土地也只有23万町步，占23.7%。在朝鲜拥有大规模土地的地主阶层比韩国少，因此，如果只没收他们的土地，就无法充分分配给农民。

没收的土地是“全部用于租佃的土地”，也就是说虽然拥有的土地很少，不属于5町步以上的地主阶层，但自己的土地不是直接耕种而是租佃给别人的土地，还有“持续用于租佃的土地”，即部分土地是持续签订佃约的土地，也就是说实际上来自于不直接耕种的土地。相当一部分（被没收的土地）是由不自耕的土地充当的。

在土地没收过程中，遇到了一些地主阶层的阻力。平壤市发生了向共产党委员会建筑物投掷手榴弹的事件。在平安南道，江西郡卫戍司令部建筑物旁边的二层住宅发生了纵火事件，在江东郡还发生过地主们合谋拘留积极参与土地改革事业的邑警察局长的事情。据说，在黄海道因反对实施土地改革，海州地区的200名中学生还曾拒绝上课。

相反，在土地改革实施之前，地主提前将土地分配给农民，则会被认定为“爱国地主”，在土地改革过程中对拥有5町步以上的地主没收了农具，但是对这些爱国地主没有没收农具的事例也存在。

整体来说，地主阶层对土地改革的反对并不严重。究其原因，第一，当时南北分裂的现实起到了作用。反对土地改革的地主与其抵抗苏联驻军，不如选择移居韩国。



第二, 进行土地改革的时候, 地主阶层可以组织抵抗的基础已经变弱了。解放后, 有几个地区的居民将地主作为民族背叛者提交人民审判, 也有的地区人民委员会没收了亲日派地主的财产, 期间在反对委托统治运动和新义州反共学生事件等反共运动过程中, 支持他们的地主阶层相当一部分被镇压了。

第三, 也有人指出, 在土地改革过程中, 随着农民被组织起来, 农民阶层的力量可以压倒地主阶层。在各个农村地区负责土地改革实际过程的组织是农村委员会, 农村委员会由积极活动的贫农、佃户和农业工人组成。朝鲜全国有近20万农民参加, 共组织了11930个农村委员会, 另外农村每个地区还成立了由青年农民组成的农村自卫队。

像这样, 在土地改革过程中随着农民被组织起来, 形成了地主阶层无法轻易抵抗的环境。结果, 随着土地改革的实施, 权力的中心从被没收土地的地主阶层、民族主义、资本主义阵营转移到农民阶层、社会主义阵营。

没收的土地分配给农民时, 在优先分配给该土地实际耕种者的原则下, 对每个农户的劳动力水平进行评分, 并根据评分确定分配面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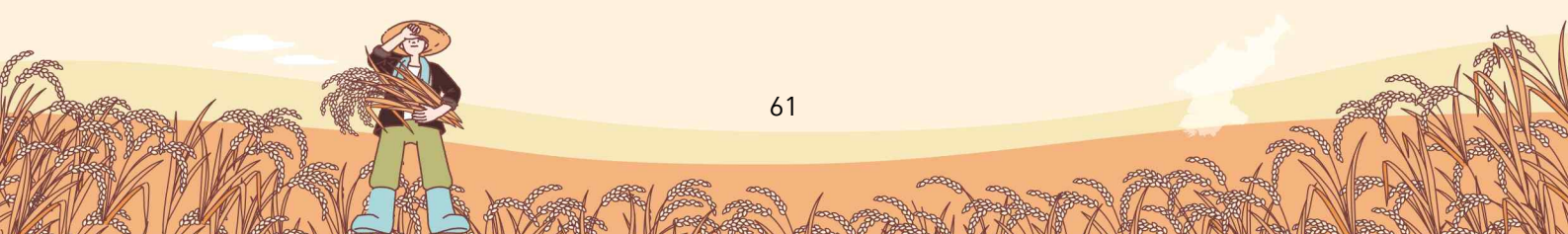
土地改革法实施细则中列出了分值表, 男性18岁至60岁, 女性18岁至50岁, 被评价为完全农业劳动力得1分, 男女15岁至17岁得0.7分, 其他年龄段的情况根据是否可以从事农业劳动, 分别得0.4分、0.3分、0.1分。

土地分配的结果是72.45万户农户平均分配到了1.35町步土地。土地改革结果显示, 各道农户平均土地所有规模存在显著差异。咸镜南道和黄海道每户平均拥有1.8町步左右, 平均规模最大, 相比之下江原道只有1.23公顷, 平均规模最小。

之所以出现这种情况, 是因为以各里为单位进行了土地分配, 与土地总面积相比, 农户数多的地区平均规模只能较小。

农户生活的地区从一开始就存在局限性, 在人口密集的地区能分到的土地便会受限, 再加上, 正如前面所说, 要根据各农户的劳动力分数进行土地分配, 因此, 从整个朝鲜来看, 这些都成为了令每个农户所拥有的土地仍不均衡的因素。

因此, 从土地改革后朝鲜农户的耕作规模来看, 拥有3.5町步以上的农户占总数的6.3%, 拥有0.5町步以下的农户占总数的10.7%, 两种极端的农户在一定程度上仍然存在。



但是作为参考，比较韩国实施农地改革后的状况和土地改革后朝鲜的状况，可以看到相当大的差异。在朝鲜虽然土地所有的不均衡性并没有完全消除，但是1町步以上的农户比率占大多数，相反，韩国农地改革后不到0.5町步的农户比率为42.7%，拥有0.5到1町步的农户占35.8%，是下层占大部分的结构。

因此，有人评价说朝鲜的土地改革是以比韩国更彻底的方式进行的。但是，朝鲜地区的耕地面积比韩国大，但人口却少很多，因此应该考虑到土地改革后朝鲜农民形成了更牢固的中间阶层。

单纯依靠土地所有无法正确判断每个农户的经济水平。因为即使拥有很多土地，但是需要抚养的家人也很多，这可能比虽然土地少，但家庭规模也小的农户，在维持生计上更为困难。

朝鲜当局考虑到这一点，进行了农户分析：把无论年景丰凶，粮食均不足的农户归类为贫农；把丰年可以自给自足，凶年粮食不足的农户归类为中农；把无论丰凶与否，均有余粮出售还可以放债的农户归类为富农。

目前可查证的以全国为单位的统计数据是20世纪50年代末农业合作化完成后的调查数据，根据这些数据，朝鲜农户中，62%左右被归类为中农，据此可推测出土地改革使农民的经济水平基本保持在同一水平。

但是，该数值是在因为农业合作化，各农户的土地全部都为了实现共同经营进行出资后调查到的内容，这与在土地所有规模对农户生计没有太大影响的情况下所调查的内容是不同的。

最后，根据法令上的原则，朝鲜的土地改革虽然采取无偿分配方式，但是分配到土地的农民需要缴纳实物税，从这一点来看，事实上应该看作是有偿分配。

另外，朝鲜和苏联当局为了确保农民的支持，从当初把没收的土地国有化的方针上退后一步，以向农民转移所有权的方式推进了土地改革，但这种所有权只不过是形式上的。

从1950年1月朝鲜当局通过内阁决定采纳的《关于土地行政》的文件上看，对于土地改革之前便已拥有的土地，可以买卖和转让，但土地改革后分配的土地则禁止买卖、转让、抵押。

如果所有者死亡，则可以由耕地的同居家人继承，但如果同居家人中没有耕地的人，则将其返还给人民委员会。这样返还的土地可以由土地较少的其他农民耕种，在这种情况下，只赋予耕作权，而不是所有权。

也就是说1946年制定土地改革法令时，看似赋予了农民所有权，但后来通过措施限制了所有权的行使，最终改变为以土地全民所有，即国家所有为目标的制度。这与韩国获得分配土地的农民可以自由行使买卖、转让、抵押等所有权存在差异。

朝鲜在朝鲜战争以后展开了大规模的农业合作化运动，土地改革的结果是赋予各农民土地所有权，虽然只能行使有限的权利，但是实际上却采取了否定这些所有权的措施。

事实上，农业合作化运动的这一结果作为规范朝鲜整个农业的农地所有制度，直到今天为止，还在运作。从这一点来看，它是理解朝鲜农业的重要事件。下节课我们将了解朝鲜农业合作化运动的内容及其结果。

1-4 朝鲜的农业合作化运动

同学们，大家好。这节课我们来看一下1950年代开展的朝鲜农业合作化运动。之前对朝鲜的土地改革进行了观察，为了尽快在朝鲜地区建立亲苏政权，确保农民的民心，朝鲜的土地改革从当初的国有化方针后退，以赋予农民所有权的方式进行。

从共产主义的理念来看，是一种选择对现实妥协的方案。但此后通过制度变化，赋予这种所有权一定制约，逐渐向国土全民所有的最终目标迈进了一步。

因此，可以说在朝鲜农业部门，让社会主义改造更上一层楼的可以说就是农业合作化运动。结果是农业合作化运动一结束，农民对土地的私人所有权就完全失去了意义，其作为朝鲜基本的农田所有制度也一直延续到今天。本节课对农业合作化的内容和开展过程进行探讨。

朝鲜的农村共同体传统薄弱，这与苏联通过农业合作化建设集体农场的先例有所不同，传统上，农民作为私人土地所有者，独立性较强，在这种条件下对他们的农业经营乃至（对土地的）所有（权）都要进行整合，可以说是非常困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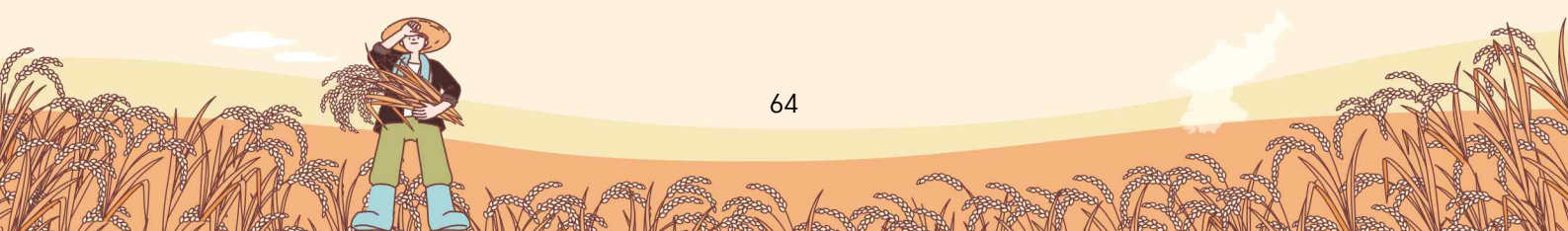
但是，土地改革后，随着韩国战争的爆发，农业需要增产，在朝鲜当局的主导下，把个别农民组织起来的生产班的运营，对双套牛、互助等共同劳动进行奖励等做法对农业增产起到了积极作用。特别是韩国战争导致贫农层扩大，他们积极要求农业合作化，战争引发的社会紧张也同样为农业合作化创造了有利环境。

另一方面，土地改革已经完成，虽然仍然存在农民土地所有不均的问题，但富农的影响力微乎其微，他们大体上已被重组为所拥有的土地规模与其他农民相似的农民，这也是有利因素。

朝鲜当局从1949年开始研究苏联及东欧事例，开始制定农业合作化方案，结果是制定了与这些先行事例有差异的方式。朝鲜的农业合作化方式不是苏维埃型，而是人民民主主义型。下面具体来看一下朝鲜的农业合作化方式。

以农村地区为单位，组织农民的经营和所有制关系，建立农业合作社是农业合作化运动的最终目的。这些农业合作社被认为是共产主义的终极目标——生产资料全民化的过渡阶段。

作为参考，被认为是列宁留下的最后的论文的《关于合作社》一文中也强调了合作社这个过渡阶段对于完成农业部分的社会主义改造至关重要。为了建立中间阶段的农业合作社，朝鲜当局提出为实现此目标要有三个具体阶段。分别是农业合作化的第一形态、第二形态、第三形态。



农业合作化的第一形态是"农村劳动力互助班"。传统的互助班、双套牛班大体上作为临时的共同劳动力组织，成员由流动的3~5户左右的农户组成，而农村劳动力互助班则被构想为由固定成员10户左右的农户组成经常性农村互助组织。

成员们将共同使用耕牛等役畜和农具，共同实行从耕田、播种、插秧、除草、秋收、脱粒等一系列农耕作业。即使属于农村劳动力互助班，本人拥有的土地照旧耕作，因此，土地之间的界限也会保持不变，这是一个重要的特征。

互助班成员只要在需要时互相帮助完成农活就可以，各自仍拥有自己的土地，因此从自己的土地上收获的农产物完全归本人所有。畜力和农具的所有权也是各自拥有，必要时可以共同使用，作为使用代价，原则上按照习惯用实物或劳动力相互偿还。

第一形态是正式成立农业合作社的准备阶段，可以说是以个人小农经营为基础，共同利用单个农民难以筹措的畜力、农具，系统地组织不同季节所需的共同劳动的形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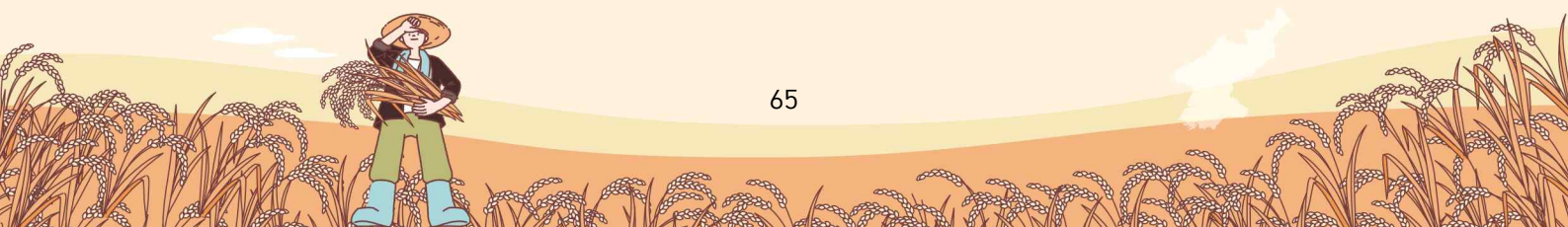
农业合作化的第二形态是指共同出资土地和生产工具，并把这些并入农业合作社的资产，共同开展农业作业的形态。此时，每个农民都可以按照自己出资比例分配到相应土地面积的收获物。另外，根据参与共同劳动的劳动天数也可以参与对收获物的分配，因此，农业合作社成员将按照自己出资的土地面积和提供劳动力的天数进行分配。

作为最先进的合作经营形态，第三种形态是农民的分配只由该农民提供的共同劳动天数决定。在这种情况下，由于出资土地的多少最终不会影响分配，因此每个农民的个体土地所有权将不再具有实际意义。

由于第二形态和第三形态的这种差异，根据利益关系，农民所喜欢的形态也会产生差异，拥有土地相对较多的富农更喜欢第二形态，土地较少的贫农更喜欢第三形态。

虽然朝鲜已经实施了土地改革，但是各农户的劳动力数量不同，以及不用于租佃，而是靠雇佣劳动进行耕作的土地会被排除在没收对象之外，因此农民之间存在土地所有上的差异，因此在合作社成立过程中农民之间也会发生利益冲突。

但从结果来看，到了农业合作化结束的20世纪50年代末，朝鲜全域100%的地区，即所有地区都成立了第三形态的农业合作社。



朝鲜从1954年开始开展农业合作化运动，朝鲜当局的正式立场是在之前介绍的农业合作化三种形态中，以何种形式成立农业合作社是各地区农民根据自己的意愿和当地条件决定的问题。

朝鲜共产党农业部长还表示，大部分农民所希望的形态是第二形态，自己也认为从朝鲜农民的实际情况来看，第二形态是理所当然的，是最合适的形态。一部分党员干部之间有执着于合作化程度最高的第三种形态的倾向，对此进行批评的同时强调要把选择合作社最重要的标准放在农民的自愿要求上。

但是，从农业合作化运动开始以后来看，以第一形态成立的事例根本不存在，在最初一年间，第二形态占46%，第三形态占54%，选择第二形态的比重相当大，但此后，以第三形态的农业合作社要占据绝大多数的运动开展起来。

1955年12月，也就是农业合作化运动开展了2年左右的时候，第三形态占农业合作社总数的92%，超过了90%，随着这种趋势的保持，在最终宣布结束农业合作化运动的1958年末，全国所有农村地区组织完成了1.3万多个第三形态的农业合作社。

有人指出，与当初朝鲜当局的预想不同，所有农业合作社都采取了第三形态是当时的各种条件产生的影响。

首先，韩国战争后形成了国家与农民之间很强的结合关系，想从战争导致的废墟和贫困中摆脱出来的农民的热情、南北之间体制对立下的社会紧张，土地改革的结果使得多数农民拥有的土地大体上差不多，这些都是背景因素。

但是，虽然只是少数但仍然存在富农层也是事实，不顾他们的反对以第三形态完成组织化，最重要的是当局的指导起到了很大的作用。

朝鲜当局为了最大限度地引导农业合作化成为更接近共产主义理想的第三形态，介入了农民组织化过程。朝鲜劳动党中央委员会在展开以贫农为中心的政策路线的同时，首先以贫农为中心组成第三形态的农业合作社，之后在组织化过程中被疏远的富农层才迫不得已加入合作社。

但是，这个过程并不顺利。朝鲜当局发行的文献中报告了多个地区展开农业合作化过程中的抵抗事例。大部分贫农和朝鲜劳动党员是积极参与合作化运动的主体，富农和以前地主出身的农民，以及农村村落内的同族集团则对合作化进行了抵抗。

即使是迫于社会氛围不得不参加合作社，有一些农民的参与也非常消极。例如，在农业合作化运动开始的1953年末，朝鲜出现了相当规模的役畜屠宰和售卖现象。

1953年8月通过朝鲜劳动党中央委员会会议确定了农业合作化的内部方针，并开始示范性地支援几个地区设立合作社，这一消息传开后出现了宰杀牛来食用、懒于饲养牛等现象。

反正农业合作社成立后，牛就会作为合作社的资产出资，与其这样还不如马上用于食用。不仅是牛，在土地方面为了避免向合作社出资，还发生了将一部分土地转移成宅旁地的事情。以下朝鲜文献的表述很好地描述了当时的情况。

“更有甚者，一些农民进入合作社后，还梦想着做双重经营，留出一部分土地和劳力，或者想要耕种超出合作社章程规定范围的更多的地；虽然只是极少数现象，但也有一些农户逃避役畜出资，或者卖大牛、买小牛入社等。”

农民大规模退出合作社的事情也时有发生。所谓的“白川风”事件，就是1956年秋季合作社结算分配后至1957年初发生在黄海道一带的农民大规模退出合作社的事件。黄海道白川地区是朝鲜地区代表性的农业粮仓地带，以大米种植为中心，是曾经地主制非常发达的地区。

据说，以前地主出身的当地富农们，对农业合作化政策有强烈的排斥感。如果加入合作社，可以免除当时需向朝鲜当局缴纳的农业实物税，因此这些人暂时加入了合作社，然后又一起退出了。

据说，按当时合作社的章程，退出是自由的，且退出时土地可以返还，因此这种行为是可能的。因为这个事件，当时的黄海南道党委员长受到了批评，并被肃清。除此之外，还有过激的抵抗行为。在平安南道，农业合作社在4个月内共报告了97起火灾，还发生了有人在牛饲料中投毒导致5头牛被毒死的事件。

农业合作化过程中的另一个障碍因素是传统上存在于农村村落社会的同族秩序。在村落内存在2个以上具有影响力的同族群体时，他们拒绝参与同一个合作社。

例如，在咸镜南道北清郡的一个里，按族别结成了7个合作社，但在将他们合并为一个合作社的过程中，农户们提出“各姓聚在一起，工作能干好吗？”、“干部来自哪个村庄？”、“财产如何处理”等疑问，拒绝了合作社的合并。

因此，朝鲜当局在推进农业合作化运动的同时，将着眼点放在了重组传统村落秩序上。1955年以后，由朝鲜劳动党实施集中指导，将那些原先就在村里有影响力，现在又在合作社中担任干部的农村名士和传统家族中的元老们排除在合作社领导层之外，用新核心阶层取而代之。

为此，朝鲜推动了让韩国战争后退伍的军人大规模返乡，把这些人灵活运用为合作社干部的方案。这一时期朝鲜人民军的人数减少了约8万名，他们在各地农村作为合作社干部，起到了重新整顿传统村落秩序的作用。

像这样，朝鲜的农业合作化运动不仅是生产关系上的大变革，也是从根本上改变农村社会秩序的社会变革。

以富农、中农上层、同族年长者等地方权威人士为中心的传统村落秩序被以贫农为首的社会主义支持层取代，有能力的女性和青年们也作为合作社的干部活跃起来，以男性和年长者为中心的家长制秩序崩溃，女性和青年层的发言权得到提升的机会。

但不可否认的是，尽管社会发生了这样的积极变化，但农业合作化运动最终只按年度劳动天数进行分配，共同进行农业经营的方式成为整个农村的基本生产关系，这使得朝鲜农业固守僵化。

举个明显的例子，此后，比起共同经营的合作社，农民们更重视自己可以完全获得全部收获量的宅旁地的经营，开始采取转移合作社的农资投入自己宅旁地的行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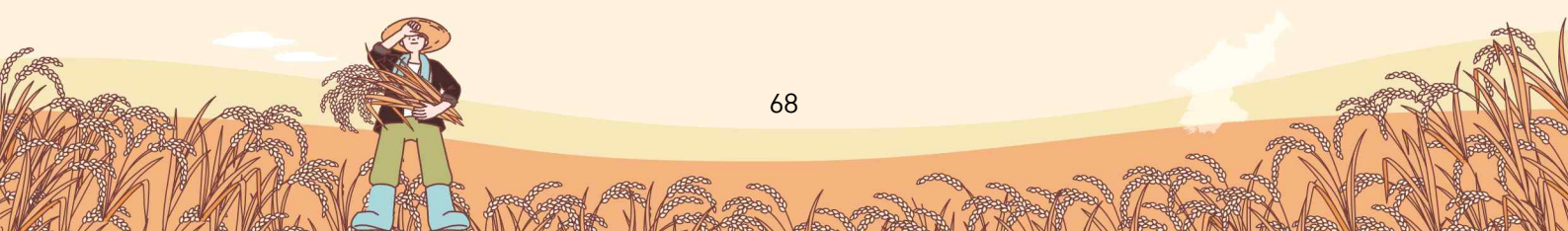
朝鲜当局在中国的事例中也认识到了这样的问题，所以之后将生产单位细分为作业分组、圃田担当责任组，采取了最大限度地使每个农民能获得的补偿与所付出的努力一致的改革措施。对此，我们将在下一节课进行更为详细的分析。

本节课我们了解了朝鲜农业合作化运动的开展过程。作为参考，我再补充几点内容。作为农业合作化运动的结果成立的农业合作社，在1962年更名为合作农场，到目前为止也基本上维持了当时的结构。当初农民加入合作社的同时出资的土地在朝鲜法令上属于合作性质的所有制，因此合作农场的土地，值到现在也还不是国有化状态。

虽然在部分地区实行了农场合并、土地国营化的国营综合农场的建设，国有化取得了一定的进展，但随着朝鲜经历经济危机，这种国营化方针已经中断了近30年。但是，对在朝鲜从事农业活动的脱北者进行调查后发现，很多人认为耕地是国家所有。

因为合作性质的所有实际上没有意义，在朝鲜，农业实际上更侧重于实现国家赋予的生产目标。因此，作为一种法律形式，农业合作化的历史至今仍在延续着合作性质的所有制观念，但实质上这种合作化的观念是淡薄的。

以此结束《朝鲜的农业》第一讲。下面第二讲将介绍朝鲜的农业现状和制度。谢谢。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다음은 한국의 헌법 121조 1항의 내용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5분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① 합리적 이용의 원칙
- ② 경자유전의 원칙
- ③ 국가소유의 원칙
- ④ 임대차 자유의 원칙

정답 ②

해설 1950년 농지개혁의 실시를 계기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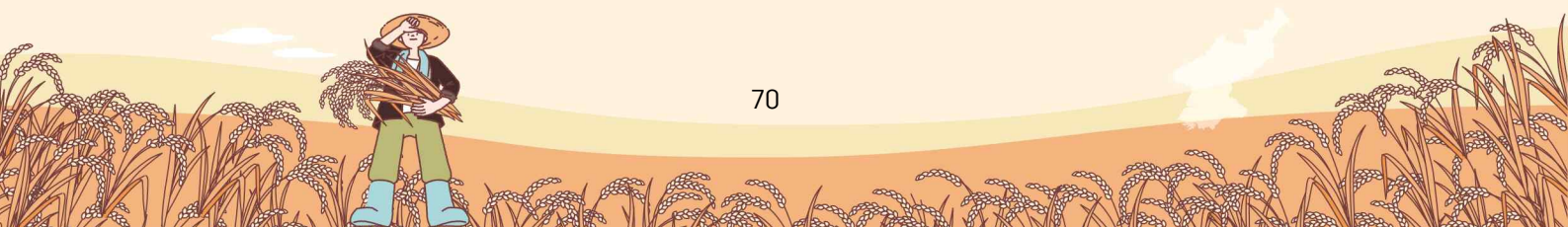
02 다음 중 지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분

- ① 조선 후기 이래 진행되어온 병작 관행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일제 식민지기 초기 상당수의 농민은 소작 경영 상태에 있었다.
- ③ 일제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지주제가 일부 완화되었다.
- ④ 북한 지역 보다 남한 지역에서 지주제가 더 발달하였다.

정답 ③

해설 일제는 지주를 식민지 농정의 파트너로 삼아 지주 친화적인 농정을 실시했으며, 농업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지체됨으로써 인구압력이 농업 부문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지주제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북한의 토지개혁 당시 지주 계층의 반발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분

- ①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지주는 저항하기보다 차라리 남한 지역으로 이주를 선택
- ② 일련의 반공운동 탄압 과정에서 지주층의 조직 기반 약화
- ③ 농민들의 높은 조직화 수준
- ④ 높은 농지 수용 보상금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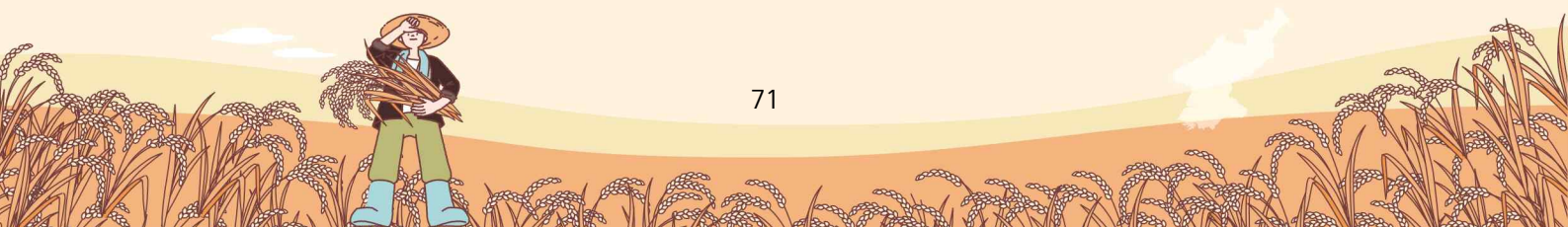
해설 북한의 토지개혁은 지주 계층의 토지를 국가가 무상으로 몰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농지 수용 보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04 다음 중 북한의 농업협동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분

- ① 농업협동화의 3개 단계를 상정하고 있었다.
- ② 제1단계는 상시적인 농촌 상호부조조직 형태이다.
- ③ 제2단계는 토지와 생산도구를 공동으로 출자하고, 토지 출자규모에 비례하여 배분 받는 형태이다.
- ④ 제3단계는 토지와 생산도구를 공동으로 출자하고, 노동력 제공 정도에 비례하여 배분 받는 형태이다.

정답 ③

해설 북한 당국이 상정한 농업협동화 3단계 중 제2단계는 토지와 생산도구를 공동으로 출자하고, 토지 출자규모와 노동력 제공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최종 생산물을 배분받는 형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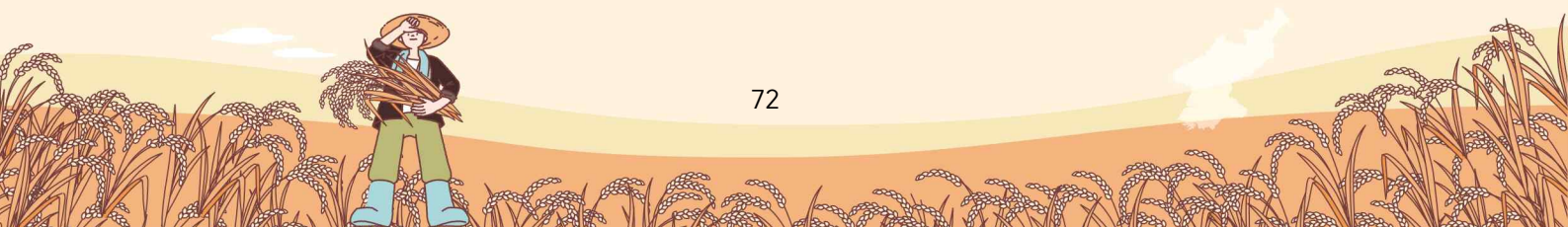


05 다음 중 북한의 농업협동화 운동 과정에서의 실제 발생했었던 저항 사례가 아닌 것은?
 5분

- ① 역축(농우) 방해
- ② 농업협동조합 탈퇴
- ③ 농업시설 파괴
- ④ 텃밭 방해

정답 ④

해설 농업협동화 운동의 결과 농지에 대한 사적 토지소유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지자 농민들은 협동조합 공동경영 보다 자신이 온전히 수확량 전부를 가져갈 수 있는 텃밭 경영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농업협동화 운동에 대한 저항으로 텃밭을 방해 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있지도 않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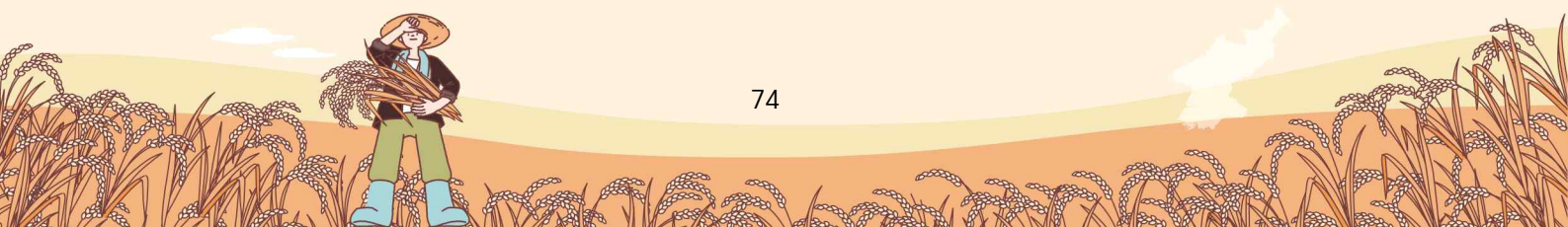
- 다음의 주제를 확인하여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MS워드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글자크기 11pt, A4 3장 이상)

주제

1950년대 북한의 농업 협동화 운동의 추진 배경과 그 경과에 대해 서술하고, 그 결과 오늘날 북한의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논하시오. (120분)

참고

북한은 1946년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이 당시에는 좌우익 정치세력 간에 정부수립을 둘러싸고 체제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당국(소련 군정 및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은 북한 지역 농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농민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원리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농지 등의 생산수단은 국가가 소유하여야 하므로, 토지개혁에서 미흡했던 소유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협동화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1950년대 초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농업 생산이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이를 공동 영농으로 극복할 필요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53년부터 농업협동화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소유관계와 분배관계에 따라 3가지 형태를 상정하여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농업협동조합이 가장 공산주의 이상향에 가까운 제3형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결과 농민의 사적 토지소유권은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오늘날 북한 농업은 인센티브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2000
- 유용태 편, 『동아시아의 농지개혁과 토지혁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